

第297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5號

國會事務處

2011年2月25日(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 1. 대법관(이상훈) 임명동의안
- 2.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附議된案件

- 비교섭단체(미래희망연대) 대표발언 1
 - 1. 대법관(이상훈) 임명동의안 4
 - 2.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5

(10시04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한공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박희태 교섭단체대표의원들께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국정조사요구서에 대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교섭단체(미래희망연대) 대표발언

(10시06분)

○의장 박희태 오늘은 대정부질문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희망연대 대표이신 존경하는 노철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 노철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금수강산은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가축 전염병이 광풍처럼 번져 질병과 환경 재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물가 폭등으로 서민 경제는 파탄 나고 전세가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은 길거리로 내쫓기고 있습니다.

전체 실업률은 다소 호전되는 듯하나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악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으로 국민들은 긴장과 안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 정권은 혼란과 갈등 조장을 일삼는 사분오열 정권이라고도 합니다.

세종시·4대강 문제로 정치권과 국민 여론을 두 동강으로 내더니 이제 와서는 과학벨트와 신공항 문제로 다시 온 나라를 종과 횡으로 나누어 갈라 쪼갬, 결국에는 헌법 개정을 한다고 국론을 공중분해시켜 한반도가 별집 쪼서 놓은 형국입니다.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이 정권을 총체적 부실정권, 소통이 없는 불통 정권, 서민 학대 정권, 배신과 허공의 정권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귀에는 국민의 비웃음과 통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의 눈에는 국민들의 손가락질과 허탈한 한숨 소리, 또 일그러진 얼굴이 정녕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국민의 통탄의 한숨 소리에 귀를 열고 중병에 찌든 국토의 아우성에 눈을 뜨고 국민의 소중한 염원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후세대를 생각하며 믿음과 신뢰의 사회 통합, 화해와 진실의 새로운 역사, 평화와 번영의 참다운 내일을 위해 사과의 대전환을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 무능한 대책으로 가축 살 도살 340여만 마리, 생계 보상금과 백신 비용 등으로 3조 원의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6일 첫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가축위생시험소는 항원검사를 못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방역당국은 매몰 처분만 고수하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뒤늦게 백신 접종을 하는 등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결국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으로 인한 인재, 그 이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첨단과학 문명시대에 살 도살 매몰 처리라는 원시적 방법밖에 없었는지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소를 키워 자식들을 먹이고,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 왔던 촌부의 피눈물 흘리는 심정을 정부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제역 재앙이 흉흉한 민심을 열고 제2의 광우병 촛불 사태로 번지지나 않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정부의 방역 시스템 또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광역 단위로 생물학적 안전 3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을 확충하고, 방역행정을 총괄할 수 있는 방역검사청 신설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전국 4400여 곳에 이르는 살 처분 가축 매몰지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와 사후 관리 대책을 세우고 방역에 투입된 공무원과 관계자들에게 2차 감염, 후유증 방지와 구제역 살 처분으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축산농가에 용기를 주기 위해 긴급 추경예산 편성 지원을 촉구합니다.

부패한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식수 오염과 자연 환경 파괴, 인체에 유해한 탄저병과 같은 병원균으로부터 제2차 환경오염 예방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금수강산을 구제역 대재앙으로부터 시급히 구해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30개 국가 가운데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비중이 29위로 최하위권이며, 근로시간은 가장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또 자살률과 교육비 부담률이 최고이고, 노인 빈곤율은 평균의 3배에 이르고 있

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복지 수준의 현주소입니다.

복지는 이념을 뛰어넘어 우리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또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미래의 생계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치권은 복지 문제를 당리당략과 선거라는 한 치 앞만 쳐다보는 포퓰리즘 식 정책 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재원 마련 문제, 가입자 간 세대 간 형평성, 장기 지속성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 검토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사회적 합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희망연대는 국회 차원에서 정치권과 학계,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미래 복지국가 건설 특위를 설치하고 각 당의 복지정책 안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 헌법에 버금가는 사회보장법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외 경제 여건의 급변으로 국제 원자재와 원유가 급등, 환율 절상 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여 서민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물가와외의 전쟁을 언급하자 9일 만에 서민 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하였습니다.

그 후 1월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기름값에 대해 언급하자 공정위는 정유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까지 나섰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가 경제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시장의 신뢰는 물론 서민 가계가 안정됩니다.

전·월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 정부에서는 DTI 규제 완화 추가 연장과 전세대출 한도를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저렴한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 대책은 어디 가고, 서민들에게 은행 빚을 내서 집을 구입하고 전세금을 올려 주라는 게 우리 정부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로 인해 발생할 국민들의 가계 파탄은 그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철 지난 재탕 삼탕 처방을 보는 국민은 허탈과 상실감에 빠져 피눈물을 흘리고, 희망 없는 삶의

나라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임기응변식 땀질처방으로 고물가와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무능, 무대책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하루 빨리 저가의 주택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각 대학은 졸업식이 한창입니다. 웃으면서 사회에 진출해야 할 청년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애통하기만 합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올 1월의 실업률은 3.8%로 전년 동기보다 1.2% 떨어졌다고는 하나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인 8.5%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모 지방대학 휴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학자금 대출 700만 원을 갚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뒤로하고 자살이라는 최후의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2008년도 대학생 자살자 332명 중 염세·비관 자살이 175명이나 되었고 이런 원인의 자살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은 한시적인 인턴제 확대와 임시직 정도이니 청년들은 안정된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다 범죄집단으로 빠져 들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가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조기 진로 선택 등 직업의식교육을 강화하고 독일의 현장 수습 제도와 같은 실용 중심 교육제도를 벤치마킹해서라도 교육시스템을 혁신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 고용할당제를 도입하고 소득 보장과 고용서비스를 결합한 청년고용안전망 구축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집권 첫 조각부터 장관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위장전입 등으로 인해 3명의 장관후보자가 하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도덕적 흠결을 사전에 알고도 인사를 강행하여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후 친서민, 공정사회 기조를 내걸었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된 인사는 그동안 5명의 총리·장관·감사원장·검찰총장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했습니다.

다.

청와대 비서 출신을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장을 시키겠다는 무모한 발상과, 도덕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안이한 인식은 결국 사퇴 파동의 악순환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국민은 대통령의 고장난 인사정책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의 잣대를 타하기 전에 인사권자인 대통령 마음대로 한다는 오만과 아집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정관지치(貞觀之治)로 유명한 당 태종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인재를 널리 구했고 어진 자를 뽑아 그 능력대로 활용하였으며 원수였던 형의 부하 위징(魏徵)을 정권을 잡은 뒤에 요직에 중용까지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 태종의 인재등용 철학을 인용하면 어떨까 하는 걸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작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태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극한적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의 위기는 미국, 중국 등의 요청과 경색된 남북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남북 군사회담으로 물꼬를 터 보려 했으나 상투적인 대남비방으로 일관된 북한의 태도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북한이 남북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책임자 문책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 경협,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남북 간 상생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종 정보를 종합해 보면 북한은 김정은 후계 체제 정착을 위한 체제 결속용 국지도발 계획과 제3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이런 전쟁 위기는 막아야 합니다.

극한 대치상황의 남북경색 정국을 푸는 데는 특사 외교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개되는 위험 부담을 덜고 진솔한 실리적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남북은 서로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 궁하면 통한다는 게 지극히 단순한 진리입니다. 실타래처럼 꼬인 남북문제를 풀기 위해 남북 당국에 특사 교환 방문을 감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은 개헌은 당에서 주도해 달라는 주문을 함으로써 정국을 다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개헌을 해야 했다면 국민적 합의하에 여야가 함께 논의한 후 임기 초반에 매듭을 지었어야 국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국민과 여야 정치권의 대다수가 개헌은 어렵다고, 안 된다고 합니다. 국내외로 산적한 국가적·정치적 현안부터 해결하자고 합니다.

그런데도 당리당략과 누군가의 유·불리 차원에서 개헌 불씨를 계속 지피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고 관념을 흘뜨리려는 술책입니다.

국론분열에 따른 국력 손실은 국가경쟁력만 추락시키고 그 손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국민들은 특정인의 개헌 요구에 많이 피곤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미래희망연대는 18대 국회 임기 중 개헌 논의와 요구는 단호히 거부하며 필요하다면 차기 정권 초에 국민적 합의하에 개헌을 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지금 국민이 정치권에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구제역 재난, 전세대란, 고물가, 실업난, 남북 간 긴장, 위협 등을 시급히 극복하고 정치, 경제, 민심의 안정 속에 서민경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 초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두렵게 알고 받들어 섬기는 그런 정권을 국민은 간절히 원하고 또 똑바로 바라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연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마이크 좀 고치세요, 마이크.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좀 고쳐.

(웃음소리)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이상훈)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10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31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공직후보자 이상훈의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지난 2월 16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이미 배부하였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법관(이상훈)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우제창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이상훈)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장대리 우제창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관(이상훈)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용인시 처인구 우제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이상훈) 임명동의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 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와 사법정책 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2월 23일 개최하였습니다.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이에 대하여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 중 주요한 질의 답변을 기록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회의록을 첨부하여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종합 의견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상훈 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후보자는 27년간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장 등을 거치면서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차장 등으로 일하면서 사법행정에도 다양한 실무 경험을 축적하는 등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능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공직생활 하는 동안 배우자 명의의 다운계약서 작성 등 투기 의혹이 높은 부동산 거래가 잦았고 공직자 재산신고에 부동산 거

1. 대법관(이상훈) 임명동의안

(10시23분)

래 사실을 누락하는 등의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법제도의 개혁 및 사법정책에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대법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후보자는 대법원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다양한 출신의 대법관이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판결문의 공개 문제, 간통죄의 처벌 문제, 표현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상훈 후보자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행위에 대하여 부적절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고도의 청렴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지녀야 할 대법관후보자로서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었고 전관예우 문제의 해소 필요성 등 사법정책과 사법제도 전반에 대하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후보자가 도덕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보이기는 하나 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이상훈)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광림 의원, 한기호 의원, 최재성 의원, 박우순 의원, 이상 네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한공식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

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우측 투표함 상단에 출력되는 투표 결과지를 확인하신 후 투표용지 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는 종료되겠습니다.

투표는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원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0시30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 하셨지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0시43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7표 중 가 117표, 부 64표, 기권 6표로서 대법관(이상훈)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10시44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 동구 출신의 민주당 존경하는 박주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요. 박 의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정부에서 입장을……

총리 빨리 들어오시라고 해요.

자, 시작하십시오.

○박주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광주광역시 동구 출신 민주당 소속 박주

선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꼭 4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의 국정 성과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기원해 왔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다수 국민들은 집권 4년차를 시작한 바로 오늘 이 시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수행 결과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명박 정부는 정치·경제·통일·외교·안보 분야 등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파산 정권, 부도 정부’라고 규정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렇게 내세우고 평가할 만한 국정 성과가 없는 정부는 이명박 정부 외에는 그 역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외교·안보 분야의 실패는 매우 심각하고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큼니다. 당근도 채찍도 대화도 전략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대북 강경정책으로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가 직접 포격을 당하는 최악의 안보 위기를 초래하면서 한반도에 평화 번영의 햇볕은 사라지고 단절과 불통의 암흑의 시대가 도래해 있습니다.

(박희태 의장, 정의화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대화의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북관계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질적 임기는 올 1년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변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년의 대북정책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남북관계의 시계를 2007년 10월 4일로 돌려놓는 대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붕괴론의 망상에 사로잡혀 남북관계를 단절시키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어지럽혀 온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합니다.

남북관계에서 지난 3년의 후퇴와 단절을 만회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을 재개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북핵 6자회담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이제는 만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대화로 소통을 해야지 일방적인 길들이기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는 대북 정책은 실패합니다. 과거의 경험이고 역사의 교훈입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나서 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전환을 통해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봄을 기대하면서 본질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어제 국정질의에서 총리께서 우리 김동철 의원의 질의에 ‘이번 임시국회에 민주당과 여당이, 등원을 조건으로 민주당이 여야 영수회담을 내세웠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임시국회가 되었던 정기국회가 되었던 간에 개의 일정이 잡히게 되면 무조건 등원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총리께서 국회의원의 국회 등원 여부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사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에 엄연히 국회의 개의는 의사일정을 작성을 해야 되고, 의사일정의 작성은 여야의 원내 합의에 의해서 운영위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을 무시하는 듯한 그 발언이 맞지 않고, 특히나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번 임시국회에 민주당의 등원 조건으로 대통령과 야당의 영수회담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가 없는데 총리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진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어제 김동철 의원이 질문하시는 가운데서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언제든지 야당 대표와 만나서 소통할 자세가 있다는 표명을 하셨다, 뭐 이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임시국회 등원과 관련해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나온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주선 의원** 그리고 임시국회 또 정기국회 개회가 되려면, 날짜가 잡히면 여야 합의에 의한 의사록 작성도 없고 일정 합의도 없이 무조건 등원해야 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취지를…… 그것을 그런 절차를 거치지 말고, 당연히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국회법상에 정해진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전제

로서……

○박주선 의원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어제 총리 말씀하신 내용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 취지는, 그런 자세한 결과는 당연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임시국회가 열렸으면 등원이 되어야, 그런 절차를 거쳐서 등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취지의 말씀이 그런 과정들이 생략된 상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박주선 의원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3년은 단절의 3년이라고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박 정권은 비핵 개방 3000 정책을 대북정책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이 비핵 개방 3000의 정책이, 과연 3년간의 대북정책의 성과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 총리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적어도 대북정책은 북한이 호응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나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앞으로 어떤 군사도발을 해 올지 또는 한반도에 있어서 영원한 평화 구축이 될지 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와 의지도 달려 있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이 우리가 요구하는 정책에 순응과 호응을 해 주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치 의사가 병든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해 가지고 그 처방전에 따라서 처방을 했을 때 약효에 의해서 병이 고쳐져야 되는데, 우리 대북정책은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 총리께 한번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3년 대북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이 대북정책을 이런 기조로 유지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에 대한 총리의 솔직하고 소신에 찬 답변을 좀 요구를 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아시다시피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에 얻게 될 혜택 같은 것을 전제로 한 정책입니다. 또 우리 현실에 있어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과거 정부 시절에 정말 좋은 선의를 가지고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지만 비핵화의 실현이라든지 개혁·개방을 이끌어내는 데는 일응은 성과

를 거두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성적 고려에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이 정책입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도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해득실을 따지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선뜻 이러한 정책에 호응할 수 없었던 그런 것 때문에 오늘까지 특별한 진전은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올바른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로서는, 남한 정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이걸 끌고 나가는 것이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시행을 해 오는 과정에 북한 측의 강고한 태도, 북한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정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북한쪽의 사정도 고려를 해 가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박주선 의원 비핵 개방 3000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북한이 우리 뜻을 수용을 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엮드려서 천안함을 사과를 하고 연평 사건을 사죄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를 못했고 또한 연평 사건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에 제소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천안함과 연평에 대한 북한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를 하면서 또 대화의 진정성 타령만을 계속하면서 사실상 대화를 거부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은 더 증강이 될 것이고,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는 북한이 또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걱정과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서는 팽배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계속 비핵·개방·3000이라는 정책을, 정책도 아닌 구호를 가지고 이렇게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의지도 없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북정책의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유엔 안보리에서 이런 문제들이 한국 정부의 의지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관련된 국제정치 사정에 따른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당분간의 교착이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한국 정부가 끌려 다니거나 길들이기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강고한 태도를 가지고 나올 때 그것 달래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쪽으로도, 북한이 변화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그걸 위한 대화도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러한 대화를 포함한 모든 정책을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진정성이나 개혁·개방의 의도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교착에 따른 책임은 북한이 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변화시키는 노력도 더욱 더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주선 의원** 그러면 비핵·개방·3000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고,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북한이 대화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여지면 대화도 거절할 것이고 앞으로 이명박 정권 내내, 영원히 북한과의 이런 대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북한을 비핵·개방·개방 쪽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의원** 아니, 대화도 거부를 하면서, 북한의 일방적인 굴복만을 요구를 하면서 어떻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건지, 만나 봐서 이야기를 해 봐야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니까요, 그런 모든 절차, 방법에 관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비핵·개방·개방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온갖 노력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북한이 지금 현재와 같은 저런 강고한 태도를 영원히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의 입장일 것이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 총리께서 대북정책의 허황됨, 그리고 무용론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대통령께 진지한 자세로 건의를 한번 해 가지고 남북관계에 개선과 향상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금 이런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든지 대화를 해서 그런 쪽으로 이끌어야 될 것 아니냐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고, 그런 점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서 소상히 밝힐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의원**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 남북 정상회담이 즉각적으로 추진되도록 총리께서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대통령께서도 기본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하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만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정상회의인 만큼 그러한 회의가 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주선 의원** 지난 2월 5일 북한 주민 31명이 승선한 북한 선박이 NLL을 넘어서 표류를 해 가지고 2월 7일 우리 정부에서 표류선박을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가 끝나게 되면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북한으로 송환을 시키든지 귀순을 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이 지금 20일이 지났습니다. 이 북한 주민 31명이 지금 어디에 있으며, 그동안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으며, 왜 지금까지 결정과 조치를 내리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만간에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밝히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 본인들의 의사가 충실하게 반영이 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 이 문제는 북한 적십자사에서 북한 주민들을 송환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그동안의 관례에 비추어 보게 되면 이미 조사시간이 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상대로 소위 말하는 귀순의사를 억압을 하기 위해서 또는 체제 경쟁에 활용을 시키기 위해서 산업시찰을 보내고 또 우리의 변화가를 구경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만일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북한의 인권을 주장을 하면서 본인들이 북한에 귀순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즉각 중지되어야 될 것이고, 사안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또 하나는 마치 31명이 귀순이 되게 되면 실패한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큰 성과를 내는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귀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일을 지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사실관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산업시찰이다 서울 구경이다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박주선 의원**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전혀 사실이 아니고,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31명의 숫자가 다른 때보다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조사가 다소 늦어져서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어떤 공작 차원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박주선 의원** 이미 체제 경쟁은 끝났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물론이지요.

○**박주선 의원**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대로 빨리 송환조치를 하도록 해 주시고, 이 문제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또 새로운 걸림돌이 절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주선 의원**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이 T-50 무기 협상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의 숙소를 침입을 해 가지고 연일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된 수사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국정원 3차장 산하

에 있는 산업보안단 소속 실행팀이 직접 롯데호텔에 있는 특사단의 숙소를 침입해서 노트북을 훔쳐 왔다고 하는데 이 조사결과가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언론보도에 그런 이야기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최종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는 아니고요,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확실하게 공표할 정도로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의원** 아니,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됐어요? 지금 이 문제가 16일부터 진행이 돼 가지고 오늘이 25일이니까 만 10일이 지났는데 이 간단한 절도사건을, 이미 CCTV에 다 찍혀 있고 지문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왜 경찰청장은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그런 이야기를 했으며, 왜 국가정보원이 관여가 안 됐다 한다면 ‘우리는 관여가 된 일 없다’ 하고 당당히 나서서 이야기하면서 언론의 과잉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제가 현재 최종적으로 확인한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하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외교관계하고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선 의원** 오히려 외교관계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고 국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상하게 진실을 밝히고 진상을 밝혀서 사죄할 것 있으면 사죄를 하고 국정원을 비롯한 관계 권력기관을 개혁할 것은 개혁을 하고 하는 것이 총리의 소신과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행동으로 나가야 될 문제 아닌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주선 의원님 지적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정치·외교 또 이런 현실에 비추어볼 때 사실관계가 어떤 경위로든지 정확히 밝혀지고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그 전후 배경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불쑥 제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총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주선 의원** 아니, 제가 불쑥불쑥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사가 진행된 것이 10일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보고를 못 받으셨다 한다면 그것은 총리로서의 행정부 내의 지위와 위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제가 사실관계를 총리실에 이야기를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확인을 해 놨는데 아직은 전부 사실관계가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파악한 사실을 이야기를 해서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주선 의원** 외교관계를 내세우고 국익을 내세워 가지고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기가 어렵다, 말씀드리기 어렵다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를 하고 진상을 은폐를 해서 이 문제에 관련된 국정원의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청와대를 포함한 대한민국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권력기관의 암투 내지는 권력기관의 과잉경쟁, 충성경쟁에서 벗어난 국익을 해하는 정말로 망신스러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이것은 국가정보원이 아니고 국가망신원으로 개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말씀하시는 권력 암투다, 경쟁이다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주선 의원** 지금 북한당국에서 국회 회담을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저는 북한의 백두산 폭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남북한이 공동 전문가들이 참여한 조사를 해 가지고 사전에 방지를 하고 폭발이 된다 할지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남북 상황이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비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국회 회담, 그다음에 백두산 화산 폭발을 공동조사하기 위해서 북한 방문, 북한의 협조 등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총리 입장에서 국회 회담과 관련된, 또 아까 말씀드린 백두산 화산 폭발의 공동조사·대비책 강구를 하는데 있어서의 입장과 앞으로의 협조와 관련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국회 차원의 대화는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실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 전체의 진전 관계 등을 함께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대화라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필요하고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두산 공동조사 문제 관련해서도 우리가 남북 간에 대화·협력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한 이런 거다 생각을 하는데, 다만 남북관계가 모든 부문에서 합리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것과 페이스를 맞춰 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여건이 되어 가지고 공동조사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주선 의원** 2007년도의 10·4 남북 정상 공동선언과 2007년 12월 달에 개최된 남북 총리회담에서 국회 회담을 적극적으로 개최를 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은 국회 소관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견해를 밝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협조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적절한 태도이며 앞으로도 통일부장관처럼 그렇게 정부 방침이 정해지는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처음 북한 측에 그런 의사를 표명한 것이 북한의 책임 있는, 말하자면 이 국회의 카운터파트에 해당이 되는 인민최고회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소위 통일전선 측의 기관에서 그 제의를, 말하자면 우리나라 각 사회단체를 비롯해서 거기에 국회도 함께 이렇게 한 이런 관계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회하고 파트너가 되는 그런 쪽도 아니고 그야말로 통일전선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하는 그런 기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이제 DHL로 정식으로 국회에, 저쪽 국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문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지난 10월 25일 한·EU FTA 안에 대해서 국

회에 비준요청서를 보낸 일이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의원** 그런데 한·EU FTA는 한국말을 비롯한 23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것을 전부 다 정본으로 하기로 본협정에서 협의를 한 바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의원** 그러면 국회에 비준 요청을 할 때에는 23개의 문안으로 번역이 된 정본, 이 협정문 전체를 국회에 보내면서 국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비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의원** 그런데 왜 그동안에 23개의 정본 가운데 2개의 정본만 국회로 보냈느냐, 이것은 국회에 대한 무시 행위이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비준 권한을 침해한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1개의 정본을 보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외교부에서는 이를 사실상 거부를 하다가 어제야 본 의원이 집중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나머지 21개의 정본을 보냈는데, 사실이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보냈는데 우리 측 보관본은 EU에서 CD로 제작해서 저희한테 보내온 후에 이제 오는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지난 이천…… 그러니까 이달 2월 4일 날에 접수를 했고 또 그것이 파우치 통해서 오느라고 좀 본부까지 전달이 늦은 건 사실입니다.

○**박주선 의원** 아니, 그렇다면 이 23개의 정본이 각각 27개의 EU 나라에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정본인데 27개의 나라에 각각의 정본이 잘못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시정을 하도록 하고 사전에 검증을 해야 할 텐데 전연 검증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한글본하고 영문본만 국회에 보냈다는 것인데 이게 한·EU FTA에 대한 비준 절차를 요구하는 외교부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 문제는 당초에 EU측과 협의를 할 때 EU에서 검증을 하고 이것이 검증이 끝났다 하는 외교 공안을 저희들한테 같이 보내기로 양해를 했고 EU 측에서 그렇게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증이 된 것으로, EU에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박주선 의원** 아니, 한국에서 검증을 해야지요. 지금 영문본하고 한글본이 틀렸습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우리 왁스류하고 완구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부분이 영문본하고 한글본하고 틀려 가지고 비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외교부장관은 사과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오류가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그 문제는 국회 측하고 협의해서 합당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주선 의원** 잘못됐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오류가 있었습니다.

○**박주선 의원**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의화** 박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작을 출신의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몽준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동작을 정몽준 의원입니다.

앞으로 5년입니다.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향후 100년을 규정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로 규정되는 지금의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커다란 숙제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커졌고 대량살상능력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안보가 국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것은 아닙니까?

한 전직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에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안보정략주의, ‘비겁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또는 반대로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북한을 응징하자’는 안보 포퓰리즘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민족 통일의 주역은 국민입니다.

안보정략주의와 안보 포퓰리즘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배반입니다.

총리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총리 답변 중에서 총리께서는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헌법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조치를 총리께서 소신껏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총리께서 안 하신다면 이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런 문제는 제도가 선행해서 개선되어야 된다, 법적·제도적인,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몽준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요, 현행 헌법 내에서도 총리께서 가령 국무위원 제청권이라든지 그리고 예산 심사를 실질적으로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을 총리께서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나인데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인 권한은 충실하게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몽준 의원**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이후에 북한을 줄곧 두둔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직후 미국의 조지워싱턴 항모가 포함된 한미합동훈련 계획은 수정되었습니다. 서해를 사실상 내해로 간주하는 중국의 항의에 밀렸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의 국제 합동조사단 구성 당시 우리는 중국을 반드시 참가시켜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요청했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무슨 변명을 하든 중국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우리 외교의 한계였습니다.

총리께서는 중국이 서해를 자신의 영해로 간주하는 내해화가 우리 안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중국이 서해를 자기네들 영해 내지 내해화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저로서는 기본적으로 양국이 자기의 영해 수역 내에서 주권을 충실하게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수역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 안보를 포함한 모든 활동 거기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과 불필요한 마찰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몽준 의원** 총리께서는 법조인이시니까 그렇

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한미합동훈련은 공해상 아니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몽준 의원** 그런데 중국이 항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계획이 수정됐는데 그렇다면 중국이 서해 공해상에서 대규모 합동훈련을 할 경우에 우리도 항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의하신 적 있어요?

○**국무총리 김황식** 조지워싱턴호가 원래 서해로 오기로 했다가 동해 쪽으로 갔다 하는 것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애당초 서해로 오기로 방침이 확정돼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사훈련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법상 또 국내법상 정당한 근거를 가진 그런 행위로 한다면 떳떳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중국 측의 그런 활동도 우리 국익에 침해되고 국제법이나 우리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목소리로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몽준 의원** 중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의존도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을 못 한다 이렇게 오히려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의 92%는 연평도 사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유감을 표시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58%는 경제 분야에 문제가 있더라도 중국에 항의할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우리가 현실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기는 하지만 중국도 저희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입장입니다. 이와 같이 한중 양국은 경제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타방에 대해서 무역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그야말로 상호 균형 잡힌, 호혜적인 이런 통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의존도가 높아서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을 못 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한미관계가 지난 정부보다 더 긴밀해지는 과정에서 중국이 다소 한중관계에서 불만을 가질 여지는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미관계, 한중관계를 서로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 서로 보완해야 될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필요한 협력, 또 소통을 강화해

나가되 한국 정부로서는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떳떳한,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협조를 구할 것은 협조를 구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다만 천안함 폭침사건이나 연평 도발 이후에 중국 측의 태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종전의 중국과 북한 간의 오래된 관계, 또 한미관계에 따른 중국의 입장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외교적으로 잘 수습, 보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몽준 의원 총리님 말씀 고마운데요, 우리와 중국의 경제관계가 상호 호혜적이다 이 말씀은 맞지만 상호 의존도는 그 비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존도가 크고, 중국은 낮으니까 우리는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할 말은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의지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몽준 의원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리비아 교민들 수송대책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몽준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북핵은 남북 간의 군사적 균형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핵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유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절대 무기, 정치무기라고 합니다.

북한은 앞으로 핵을 등에 업고 재래식 도발을 거듭하는 '핵 그림자'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북핵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수천 기의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기에 둘러싸인 중국으로서는 북한 핵이 무슨 대수냐는 태도입니다.

중국의 속내는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과연 핵무장을 추진할 정치적 의지나 물리적 여건이 되겠느냐 하는 냉소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지루한 줄다리기에 지쳐 있습니다. 핵 폐기가 아니라 핵 확산 방지로 목표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나 테러단체에 핵을 제공하지만 않는다면 북핵에 대해서는 묵인하겠다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북한의 핵 개발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또 국제비확산체제를 흔드는 도전이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우리나라 미국이나 중국 간에 모두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 나라와 일본, 러시아까지 해서 6자회담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정몽준 의원 최근에 중국의 한 고위 관계자가 지난달에 통일 한국이 핵 무장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발언한 것 보도된 것 보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썄요, 언론 보도는 봤습니다마는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몽준 의원 그렇다면 장관은 확인을 못 하는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정몽준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제가 바로 며칠 전에도 중국의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했습니다마는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몽준 의원 중국은 겉으로는 북핵을 반대하지만 실제로는 바로 코앞의 인도, 파키스탄이 수백 기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성능이 미비한 핵탄두 몇 기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한국, 일본,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어서 전략적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는데 장관께서는 자꾸 아니라고 우기시는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실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중국 측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몽준 의원 최근에 미국의 힐러리 국무장관은 북한은 핵무기를 6기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공식으로 했지요? 또 지난 부시 정권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힐 차관보한테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상황을 잘 관리하라, '돈 트라이 투 솔브 잇, 저스트 트라이 투 매니지 잇'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핵 폐기는 이제 목표가 아니라고 공식으로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썄요, 미국 측에서 저희들한테 북한의 핵……

○**정몽준 의원**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과 힐 차관보의 그러한 대화가 있었다는 것 장관은 알고 계세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몽준 의원** 장관은 뭐든지 확인하지 않으면 장관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장관은 그것을 다 확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하여튼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몽준 의원** 장관께서는 외교안보수석 하다가 지금 장관하시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정몽준 의원** 안보 분야에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몽준 의원** 장관, 들어가셔도 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정몽준 의원** 국방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북핵 문제는 짧게는 20년, 길게는 50년 이상 된 문제입니다. 우리끼리 책임 논쟁을 할 때는 한참 지났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은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북한 핵을 폐기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핵을 갖고 있어야 역설적으로 북 핵의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1992년 초 노태우 정부와 김일성 북한 정권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모든 전술 핵무기를 철수시켰으나 북한은 핵을 개발함으로써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우리의 핵무장은 다소 민감한 사안이지만 북핵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최소한 전술 핵무기의 재반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의원님의 북 핵에 대한 강력한 억제 대책에 동의합니다. 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술 핵무기 반입에 관련된 협의는 없었습니다.

한미 확장억제위원회—확장억제정책위원회입니다—여기에서 북핵뿐 아니라 WMD 전반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포괄적인 능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대응태세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방안은 앞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정몽준 의원** 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핵우산을 말씀하셨거든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정몽준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핵우산은 필요한 것이지만 핵우산 가지고서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한 협상의 카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아무런 수단이 없다, 핵무장한 북한과 평화공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핵무장한 북한과 우리가 평화 공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문제는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서 국제적 공조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계속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몽준 의원** 최근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이 핵무장에 찬성한다고 했고 또 2년 전에 백악관 안보담당 책임자가 전술 핵의 한반도 재반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알겠습니다.

○**정몽준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정몽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반도의 미래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안보 4대 원칙’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안보란 외교, 국방, 통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첫째는 스스로 책임지는 안보입니다.

미국은 핵무기 비확산정책을 공언해 왔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지켜 주는 수호천사가 아닙니다. 미국의 기대에 부응할 때 유사시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국가는 어떠한 동맹도 도울

수 없습니다. 베트남의 교훈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는 지혜로운 안보입니다.

우리는 대중·대러 외교를 지혜롭게 전개해야 합니다.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이더라도 우리는 의연한 자세로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물건을 사고파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수준에서 평화와 인권,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치동맹으로 올려놓아야 합니다.

연평도 사태 이후 러시아의 움직임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극화시대에 걸맞은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1990년대 초반 국교 관계가 없었던 소련과 중국을 상대로 우리가 전개한 북방외교의 교훈을 떠올려 봅니다. 당시 북방외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냉전체제가 무너지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의 정치권이 여야 없이 함께 국익을 위해 일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측 가능한 안보입니다.

북한의 전략과 도발, 국제정세에 흔들리지 않는 예측 가능한 안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무작정 기다릴 수 없습니다. 북한이 군비 증강을 지속한다면 우리도 대응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핵 폐기 일정의 로드맵을 설정해야 합니다.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시한을 정해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국민 공감 안보입니다.

국민들과의 소통은 그 어느 영역보다 안보에서 더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안보 정책은 초당적으로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당적 협력을 위한 제도와 관계를 우리 다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북핵보다 백 배, 천 배 강한 것이 국민이 공감하고 여야가 공감하는 안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보 없이는 경제도, 복지도,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정부 정책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보 의식입니다.

우리의 국민들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군대 보내고 세금 내면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

습니다.

전쟁은 피해야 하지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천안함에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마흔여섯 명의 장병들, 수색 중에 순직한 한주호 준위, 포화 속의 연평도에서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우리 모두의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웅을 제대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의무를 다한 석해균 선장의 모습에서 우리 국민의 용기와 지혜를 봅니다.

석 선장의 쾌유를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 지역구에는 현충원이 있습니다. 6·25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묘소를 참배하다 보면 역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눈부신 청춘, 꽃다운 나이 열여덟, 열아홉 살에 차가운 묘비에 이름을 새겨야 했습니다. 대부분 6·25가 일어난 지 한 달 혹은 두 달 만에 숨졌습니다.

왜냐하면 소총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한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스스로 포화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젊은 용사들의 위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분들의 영혼은 살아서 우리에게 외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 달라고, 통일된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살아 있는 우리 모두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책무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안보 전략주의와 안보 포퓰리즘, 이제는 벗어납시다. 확실히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평화적 민족통일의 주역이 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정몽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 완산 을 출신의 민주당 장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명박 정권 출범 3년째인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는 저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국민을 격분시켰던 촛불집회부터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나타났듯이 대통령의 염치없는 말 바꾸기, 4대강 사업으로 위장된 대운하 사업, 한국전쟁 이후 첫 민간인 희생을 가져온 연평도 포격, 소·돼지 339만 마리를 살 처분 시킨 끔찍한 구제역, 높아만 가는 청년 실업률과 비정규직 문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셋값과 물가, 뭐 하나 되는 게 없고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민생은 파탄에 이르고 있고 국민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답답하다 못해서 암울한 상황입니다. 잘하겠다는 의지도, 잘할 수 있다는 전략도, 잘할 것이라는 비전도 없는 3무정책으로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얻은 것이 있다면 단 하나,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한반도 긴장 고조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정치 분야 질문에서 아마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잘못된 것 중의 하나가 남북관계 미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취지는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고……

○장세환 의원 아니,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요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취지에서 남북관계에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세환 의원 그야말로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나마라도 진정성을 갖고 있는 총리이기에 아마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는 미흡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이 3년 동안 했던 남북관계 정책은 엉망이고 정말 최악입니다.

우선 북한 무시 정책에서부터 비롯됐지요. 그럼으로 해 가지고 남북 간 대화가 단절이 됐고 그럼으로 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경제에도 엄청난 손실을 미칩니다.

잠시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 저거 보고 있는 게 전시국민행동요

령입니다. 이거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봤던 그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전단으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총리,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장세환 의원 그만큼 전쟁의 공포가 우리 국민들을 엄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정권이 평화 만들기, peace making은 그만두고라도 평화 지키기, peace keeping도 실패한, 그러한 남북관계에 관한 한 최악의 정권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관한 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불명예, 그 오명을 벗으려면 저는 남북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 들어서 남북대화를 얼마를 한 줄 아십니까? 스물한 번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80번, 노무현 정부 때 171번, 전태우 정부 때 163번이나 했습니다.

그나마 이명박 정권에서 한 남북대화는 장성급 이상 고위급 회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 분야 관련 회담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남북대화 단절이 지금 전쟁 위험을 가져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까 박주선 의원님 질문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전 정부에서 참 선의로 행해진 모든 남북의 기본적인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도가 가져오지 못했고 또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지도 못했고, 좀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지만 간헐적으로 그들이 연평·대평해전 등을 통해서 도발을 하는 그 자세는 변함이 없었고 궁극적으로 핵무기 개발은 진행이 됐다, 또……

○장세환 의원 그것은 총리께서 인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총리 인식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추진을 하고 북한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개혁·개방에 이끄는 길은 종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원칙하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진행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 나가면 영구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길

이 열릴 것이다 하는……

○**장세환 의원** 그게 언제 됩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가능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북한을 평화·번영·상생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적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도해야 할 적, 북한은 붕괴된다는 근거 없는 북한 붕괴론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비핵 개방 3000, 참 좋지요. 그러나 조건을 달면서 대화를 하자고 하면 누가 그 대화에 응합니까? 이명박 정권은 남북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조건, 그것도 참 실현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들만 꼭 달고 있습니다. 하지 말자는 것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전략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그런 정도 정책은요, 아르바이트 대학생 갖다 놔도 충분히 합니다. 전문가인 지금 현인택 통일부장관한테도 이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까마는 저런 전문가, 고급인력 갖다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총리,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이것은 이명박 정부 안에서 어떤 성과를 도출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영원한 평화 안정을 위해서는 정권을 넘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성과를 내는 것에 조금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장세환 의원** 총리, 제가 묻겠습니다.

짧은 시간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장세환 의원** 아니, 좀 봅시다.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원이 나중에 가 가지고 언제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이 다 모여져서 그게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명박 정권이 이 대북정책에서 전혀 하지 않고 손놓고 있는데 언제 어느 세월에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 민주당한테 넘기세요. 우리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과의 상생·공영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붕괴되거나 또는 흡수 통일되어야 되는 대상으로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런 전제하에서 북한이 우리……

○**장세환 의원** 총리의 진정성을 믿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전문가한테 다시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남북 대화가 단절됨으로 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이것이 경제에 엄청난 손실로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적 피해만 해도 한 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고 간접적 피해까지 하면 한 16조에 이르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가 작년에 밝힌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피해만 해도 6250억 정도 됩니다. 이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금강산 관광의 경우에는 지적하셨으니까 말씀입니다마는 그 희생된 민간인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만 내놓고 약속을 하면……

○**장세환 의원** 금강산 관광뿐만이 아닙니다. 남북 대화 단절 자체로 인해서……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그야말로 원칙적이고 단순한 우리 정부의 요청에 대해서도 북한 측은 그것을 수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저쪽 요구에만 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북한이 함께 근본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장세환 의원** 총리,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영원히 경색되는 겁니까?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국민들한테 다섯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남북관계 무조건 대화입니다.

총리,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통일부장관이 그런 약속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저는 남북관계에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장세환 의원** 무슨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데……

○**장세환 의원**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 포격 도발에 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도 하고 비핵화의 진정성을 저희 정부가 조건으로 내세우

지만 그런……

○장세환 의원 총리, 천안함·연평도 전에 말입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현인택 장관 그 전에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처음으로 조건을 내겁니다. ‘비핵화하지 않으면 남북경협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부터 남북관계가 꼬이고 경색되기 시작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북한을 과거……

○장세환 의원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그러니까요 이명박 대북정책의 기본이 북한이 과거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갖고 남쪽을 길들이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반성적인 고려였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 어떤 성과 그것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또 다른 성과가 지금 대북정책에서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장세환 의원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북한이……

○장세환 의원 지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요……

○국무총리 김황식 노력을……

○장세환 의원 더군다나 성과는 전혀 없습니다. 국민 눈에 보이지 않고 국회의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찌 총리 마음속에만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취지는 이겁니다.

가시적인 어떤 성과보다도 원칙을 세워서 북한을 변화로 유도하는, 그래서 북한으로서도 자기네들이 종전에 해 온 방식으로는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변화를 유도하는……

○장세환 의원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그러려면 대화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래서 제 말은 그겁니다. 북한의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더 유도하는 대화를,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세환 의원 대화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장세환 의원 그러면 그런 점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이 저희가 말하는 비핵, 개방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위해서 대화를 하고 또 그러한 여건이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장세환 의원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남북정상회담?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현재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세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 안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세환 의원 아닙니다, 여기 국회에서 말씀하십시오.

지금 부정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잘 모릅니다.

○장세환 의원 총리가 그걸 모르면 됩니까? 이 중요한 국가적 대사를 총리께서 모르신다고 그러면 누가 아는 겁니까? 그건 대통령만 아는 겁니까, 국정원장하고?

국정원장이 지난번 미국을 갔을 때 남북정상회담에 관해서 논의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세환 의원 총리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추진 시도나 내용이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세환 의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안 밝히면 어떤 자리에서 밝힙니까? 이 자리는……

○국무총리 김황식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장세환 의원 민의의 전당……

○국무총리 김황식 예, 맞습니다.

○장세환 의원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데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장세환 의원 그러면 비공개 장소에서는 말씀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세환 의원 그러면 그런 기회를 국회 차원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들어가시고 통일부장관, 문겠습니다.

2009년 2월 인사청문회 때 국민 앞에 다섯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대충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세환 의원** 그것 지켜지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썄 이게, 그건 저의 어떤 생각과 희망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현실이 있으니까요 지켜지는 것도 있고 아마 못 지키는 것도……

○**장세환 의원** 지켜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썄, 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간……

○**장세환 의원** 일일이 다 말씀…… 아니, 지켜지는 것도 있고 그런다는…… 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일일이 다 말씀하기 어려운?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아까 총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남북한 무조건 대화 그런 얘기 했었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고, 남북한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지켜졌고 노력조차도 안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한 것은 국민한테 한 약속이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장세환 의원** 그리고 총리의 소신과 철학이었지요? 그냥 하는 건 아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

○**장세환 의원** 아니, 장관의 소신과 철학이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장세환 의원** 그 소신과 철학이 이렇게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장세환 의원** 이명박 정권 들어와 보니까 소신과 철학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지 않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남북 대화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대화에 대한 바람직한 그 모습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 간 현실이,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지난 3년 동안 상당히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제가 답변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환 의원** 예, 어디 한번 들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정부는 남북 대화를 통해서 그야말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또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지난 남북관계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정부의 어떤 선의에 있어서의, 그야말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켰다 하는 그런 의도나 그런 방향과는 달리, 잘 아시겠습니까만 불행하게도 2008년 7월에 금강산 사건이 일어났고……

○**장세환 의원** 장관.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 식으로 남북관계가 좀 악화됐습니다.

○**장세환 의원** 제가 얘기를 죽 들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앞뒤가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서부터, 아까 총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김하중 장관 때부터 이게 단추가 잘못 꿰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지요.

우리 자존심 살리는 것, 좋습니다. 저는 자존심 굽혀 가면서까지 북한 김정일 정권하고 대화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정몽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전쟁 없이 한다면 당연히 평화입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는 것이지요.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은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다 통일부 정책 자문을 했지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장관으로서 취임할 때 한다고 약속을 해 놓고 그런 것도 안 지키고……

저는 장관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이명박 정권에도 도움이 되고 장관의 학자적 명성에도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고 또 그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가 평화를 지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적으로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 정부는……

○**장세환 의원** 아, 평화를 지향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어느 정부보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세환 의원** 무엇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부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정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

○**장세환 의원** 그건 글썄 한갓 구호에 불과합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그 인정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국민이 인정을 못 하는데? 국민에게 인정받게 하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어느 정부가…… 저희 정부가 그렇습니다마는 평화를 지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정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해서도 안 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저희 정부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장세환 의원** 말씀은 참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북한 위화도 개발을 중국이 하고 있지요? 그러기 전에 북한 평건그룹이라는 데서 북한 당국 허락까지 얻어 가지고 우리 기업에 투자유치 의향을 물어오지요?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썄 그런 내용을 저희 정부하고…… 어떤 특정 기업들이 정부에 무슨 그런 요청을 했거나 또 상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세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평건그룹이 했다는 그 자체는 알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세환 의원** 그 기업이 어디입니까? 현대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지 않습…… 하여간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세환 의원** 좌우간요 그때 이 기업이 투자를…… 결국 통일부에, 우리 정부에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뒤에 매리라는 주식회사가 북한에 참치공장 건설하겠다고 유

치 신청을 하지요? 그런데……

그건 모르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세환 의원** 그러면 통일부장관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썄요, 저희 정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상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잘……

○**장세환 의원** 아니, 무슨 말씀이예요?

자, 이거 통일부장관 명의로 해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 유보 통보’ 해 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이런 것도 지금 장관이 모르고 있다는 게,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이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장관의 통일 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장관이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썄 그 점에 대해서는, 위화도·황금평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기업이 정부에 대해서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한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세환 의원** 위화도가 아니라 매리주식회사라니까요.

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외교부장관.

지난 16일 날 일본 외교부장관하고 회담을 했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장세환 의원** 그때 마에하라 일본 외상이 한국이 점거하는 다케시마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표방했다, 사실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장세환 의원** 그게 일본 신문에 보도된 걸 알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보도된 건 알고 있습니다.

○**장세환 의원** 그러면 오보한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장세환 의원** 근거 없이 그렇게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일본에서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장세환 의원**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않습니다?

-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마에하라 장관이……
- 장세환 의원** 독도가 우리 영토라느니……
-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 장세환 의원** 다 알려지기는요? 뭐가 다 알려져 있습니까?
-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리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 장세환 의원** 외교부가 너무 대응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독도 문제는, 일본의 의도는 자꾸 독도 문제를 떠들어서 국제 분쟁화하자는 것이고 저희는 우리 영토기 때문에 확고하게 우리 영토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 장세환 의원** 이런 식으로요, 지금 조용하고 단호한 외교를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용하고 무능한 외교입니다.
-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지 않습니다.
- 장세환 의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요 어느 날……
‘자, 그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했을 때 너희들 뭐라고 했느냐?’ ‘안 된다’ ‘아무 소리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다.
-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일본의 신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독도가 일본 땅 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 장세환 의원** 그건 장관의 생각일 뿐이고.
지난 22일 날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열렸을 때 민주당 의원 2명을 포함해서 13명의 일본 국회의원들이 갔는데……
-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 장세환 의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외교부가 무슨 입장을 발표했습니까?
-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적절치 않다는 것을 저희가 논평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 장세환 의원** 누구 명의로 했습니까?
-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외교부 대변인 논평으로 했습니다.
- 장세환 의원** 대변인 명의가 아니었지요. 당국자 명의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꾸 너무……

됐어요. 들어가십시오.

-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 장세환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장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평택갑 출신의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평택 출신 원유철 의원입니다.

동북아 안보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무력 도발이 사라져 가고 있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군사적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북한 핵, 역사 인식, 영토 문제를 둘러싼 협력과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이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선포한 2012년이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2012년은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정권 교체 시기가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최악의 경제난으로 빈사상태에 빠진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군정책과 핵 카드에 의지해서 시대착오적인 3대 세습체제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이 마지막 수단으로 도발할 가능성과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이 동시에 우려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한반도의 상공에 핵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파멸의 핵에 맞서 평화의 핵을 보유하자는 제안을 저는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핵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 없는 세상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두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무런 독자적인 자위수단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북핵 위협에 질질 끌려다녀야 하는지 솔직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는 통일이 달성될 때 해체를 한다는 조건으로 핵을 보유하자는 조건부 핵보유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무총리 김황식 예.

○원유철 의원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반도가 비핵화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 개발 경쟁보다는 6자회담 등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북한의 핵 보유에 대응해서 우리가 또 핵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원유철 의원 그런데 조건부 핵보유론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판단이 그 안에 들어 있고요. 또 우리가 미국과 한미원자력 개정 협상 시에 사용 후 핵처리 권한과 관련해서도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다양한 의견 중에 그런 의견도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안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체를 통해서 북핵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가장 현실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유철 의원 저는 조건부 핵보유론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원유철 의원 북핵 위협에 대해서 아무런 독자적인 자위수단 없이 동맹에게만 계속 의지한다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지적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고민도 또 그와 관련해서 있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지금까지 해 온 대로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에 의해서 북핵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원유철 의원 물론 한미동맹의 튼튼한 기초하에서 한반도의 안보를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동맹에게 많은 의존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지적해 드립

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현대전에서 공중전의 우세 확보는 승패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천안함 폭침 사태 때나 또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무력도발 시에 공군의 정밀타격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된다는 점을 일깨워 주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원유철 의원 그런데 사실 공군에서 차세대전투기 사업을 예산상의 이유로 지금 진행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총리께서 앞장서서 이 공군의 차세대전투기 사업을 하루빨리 진행을 시켜서 유사시에 효과적으로 북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안보 환경이나 또 우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미국의 스텔스기가 한반도에 출현하게 되면 북한의 지도부가 안전부절 못 하고 지하대피 시설에 숨는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다 아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지금 중국이나 일본도 스텔스기를 2016년까지는 배치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하루빨리 스텔스기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차세대전투기 사업이 추진되면 그 안에 당연히 이와 같은 전투기 도입도 함께 포함시켜서 계획을 추진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예.

최근 이집트 리비아 사태에서 불고 있는 민주화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 원유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성공한 우리 '아덴만의 여명작전', 참 온 국민들을 기쁘게 했고 또 원유 수송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세계에 떨친 쾌거였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제 우리 청해부대의 최영함이 리비아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

한 우리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수행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아덴만에 파견되어 있는,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구축함이 1척밖에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원유철 의원 그런데 인도나 중국, 심지어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에서도 한 2척 정도가 파견되어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1척 가지고는 도저히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쪽 수역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1척 가지고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마는 그러나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의 여건하에서 2척을 거기에 파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유철 의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 6척의 구축함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 파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최소한 4500t급의 구축함 추가 건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작전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가로 건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총리실에 주한미군기지 이전 대책 사업을 총괄하는 감독기구가 있지요? 조직이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이 설치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그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재배치 사업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가족을 동반해서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그 문제는 이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2015년에 전작권이 이전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원유철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2016년에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군기지 이전 완료 사업 시기가 2016년으로 연기됐어요. 연기됐기 때문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도 현재는 2014년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연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원유철 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예, 아주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또 필요한 법의 개정이나 정부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원유철 의원 또 LH공사가 재정난으로 인해서 미군기지 이전 부지조성 사업 2단계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 사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반환 예정 부지를 조기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반환 예정 부지의 조기 매각을 위해서 다각도의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정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예산안 투입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대책까지도 아울러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유철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이 2016년에 반드시 끝나야 되고, 왜냐하면 전작권 이전 문제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한미 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총리께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주한미군 이전 사업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비가 있는데요, 제대로 그동안 집행이 안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평택지원비가 단순히 평택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또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셔서 당초 정부가 약속한 대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리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재정 상황 등을 종합해서 평택지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록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는 지역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동두천시·의정부시 등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이 당초 2011년까지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 유치라든가 산업단지 조성 등 신도시 개발을 야심차게 준비해 왔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이전 시기가 늦어지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동두천 양주 출신의 김성수 의원님께서도 우리 총리님께 여러 가지 지역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이게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동두천시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총리실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에는 동두천시의 공무원도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 동두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대책, 그리고 그것을 총리실에서 어떤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해서 도울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원유철 의원 총리께서는 지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 수도권에 아무런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원유철 의원 제가 파악해 봤더니 우리 민방공 경보 매뉴얼에는 공습경보는 있는데 포격경보는 없어요. 그리고 전국 단위의 경보는 있는데 지역 단위의 그런 경보가 없어서, 최소한 인천시만이라도 그 당시에 어떤 비상경보, 민방공 경보가 울렸어야 되는데 안 됐단 말이지요.

최근에 정부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개선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공습의 경우에만 그게 돼 있어서 이번에 국지적인 도발의 경우에도 신속하게 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전부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직통전화 개설 등 군부대와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그런 노력,

그리고 경보 발령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전부 일응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총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요즘에.

인도네시아 특사단 사건으로 인해서 물의를 빚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가 만들어 낸, 정성어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낸 T-50 고등비행훈련기를 인도네시아 수출을 하는 데 혹시 지장이 생긴 것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인도네시아로부터 공식 통보를 아직까지 받지 않은 상태이고 협의는 잘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유철 의원 잘 마무리 하셔서 T-50 수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장관께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그리고 국방부와 국정원 간의 갈등설이라든가 뭐 암투설 이런 것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왜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서로 긴밀히 협조하는 기관이지 갈등이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또 갈등설은 사실무근입니다.

○원유철 의원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한미연합사가 이번 달 말일부터 북한의 국지도발이라든가 급변사태를 대비해서 키 리졸브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원유철 의원 북한이 항상 이 훈련이 끝나면 도발을 했고 지난 천안함 사태도 이러한 훈련이 끝난 다음에 도발을 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라든가 또 도발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도발할 것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천안함 사건, 또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도발 유형을 봤을 적에 3월 달 키 리졸브 전후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여러 가지 도발 유형을 상정을 해 놓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

비하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국민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북핵 또는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해서, 92년도이지요, 92년도에 다 철수한 미군의 전술 핵을 한반도에 재전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측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한미 간에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원유철 의원** 앞으로 계획은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원유철 의원** 현재까지 없다는 것은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항상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뭐든 다양한 상황은 상정돼야 됩니다마는 전술핵 문제 재배치 관련돼 가지고는 협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원유철 의원** 앞으로 확장억제력 관련된 협의가 있으면 이 문제도 논의될 수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핵 문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방위하기 위한 모든 대책은 협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유철 의원** 한미미사일지침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원유철 의원**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새롭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측면에서, 또 실질적인 안보상 필요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계 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문제가 있는 점은 반드시 이번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군사외교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강대국가, 예를 들어서 한중·한러·한일 국방부장관 회담 관련해서 뭐 추진하는 것이 있다면 소개 좀 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주변국과의 군사 협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근본은 한미동맹이 기본 축이 됩니다마는 주변국과도 군사 교류를 점점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건이 맞게 되면 중국과도 국방부장관 회담을 계획할 것입니다.

○**원유철 의원** 남북 국방부장관 회담 성사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희는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겪고 나서 우리가 이룩한 한강의 기적도 민주주의도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강한 국력과 국방력을 바탕으로 해서 힘의 우위가 확보됐을 때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힘은 국민들의 하나된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 앞에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원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는 정시에 속개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많은 협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주당 존경하는 박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의원**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박선숙입니다.

질문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FTA 여쭙 보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박선숙 의원 FTA, 그래도 잘된 협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네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려고 그러합니다.

질문받으시면서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일관성 문제인데요.

미국산 픽업트럭에 상용차—일반 트럭, 버스—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까,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어떤 면에서 기준 적용을 말씀하시는지……

○박선숙 의원 안전기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안전, 다 같습니다.

○박선숙 의원 같지 않아요.

자료 보세요.

추가협정 해설서 15쪽에 따르면 미국산 픽업트럭은 수입할 때 승용차로 간주해서 미국의 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국내의 안전기준과 다릅니다.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종훈 본부장,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미국과 우리의 지형이 달라서 상용차—트럭, 버스—같은 경우는 우리의 안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용차에 해당되는 픽업트럭은 특별히 승용차로 분류했습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산 픽업트럭은 승용차가 아니고 화물차로 간주돼서 승용차보다 관세 철폐가 10년 이후로 늦어져 있습니다.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외교통장관이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협상하면서 이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협상하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협상의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박선숙 의원 형평성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두 번째, 미국 수입 차의 리콜조치 시에는 우리가 미국하고 수입자에게 통보를 리콜조치 시행 전에 하고 객관적이고 충분한 설명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해관계자와 미국에게 의견청취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똑같은 취지가 한·EU FTA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틀립니다.

자료 다시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똑같은 자료인데, 한·EU FTA에는 리콜조치 시의 의무사항이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상호 적용이예요.

미국은 우리가 미국에게만 그렇게 리콜조치 시에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논증되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국은 우리에게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수출한 차는 리콜조치를 이런 것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협상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 번째, 자동차의 온실가스·연비 규제 2015년까지 10% 완화해 주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박선숙 의원 이것은 그런데 FTA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주장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우리 국내의 법규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2007년 체결된 FTA의 환경 챕터 제20장 알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박선숙 의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2010년에 협상을 진행하려면 2007년에 어떤 협상을 했는지 알고 계셨어야지요.

2007년 협상의 챕터 20장, 환경 챕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규정을 장려·보장하며,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환경법 조치를 집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FTA에 들어 있는 20장을 위반하는 추가협상을 이번에 한 것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냉동 돼지고기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자동차에서 좀 양보하고 돼지고기에서 얻었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냉동 돼지고기 경우를 보니까요. 관세철폐기간이 2007년 협상에서는 7년이었는데 이번에도 동등하게 7년이다, 외교부는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시다.

○**박선숙 의원** 자료 보세요.

이번에는 5년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알고 한 협상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국민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FTA 논의가 근본적으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무엇을 내주었고 왜 내주었는지 정확하게 설명되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와 리비아의 지금 상황이 심각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선숙 의원** 우리 국민들의 여행 금지조치 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제한국으로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는 그렇지 않습시다마는……

○**박선숙 의원** 제한경고하고 금지조치는 다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금지하고는 다릅니다.

○**박선숙 의원** 금지는 안 하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아직 리비아는 금지까지는 안 했습니다.

○**박선숙 의원** 둘 다 안 하셨어요, 금지.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둘 다 금지는 안 했고 제3종 여행제한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박선숙 의원** 여행 금지 안 하셔도 돼요, 리비아하고 뉴질랜드, 지금?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 리비아는 거의 사실상 가는 사람은 없고요. 뉴질랜드는 지진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조팀도 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 신속대응팀이 현재도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선숙 의원** 여행 금지하고 구조팀 가는 것하고…… 여행 금지하면 구조팀 못 들어갑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지는 않습시다마는 일반 국민들께 그 양국의 상황의 심각성을 저희가 알리고 가지 않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지를 완전히 하는 경우에는 또 조금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자료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외교부가 적용하고 있는 위기 대응 표준 및 실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거기에 따른 심각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계십니까, 외교부가.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박선숙 의원** 심각단계에 해당하는 조치에는, 조치를 취할 때에는 여행 금지조치가 포함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국민들이 그냥 알아서 심각하니까 안 가도록 하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건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 여행 금지국가로 일단 발표를 하면 또 다른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시다마는 실제적으로 국민들께 위험성을 알리고 하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그래도 가는 건 못 막는 것이지요, 금지조치가 안 됐으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시다만 실제로 지금 가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리비아에 가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그건 국민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고, 정부가 해야 될 조치는 정부가 하고 국민은 국민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적절하지 않습니다.

채외국민보호법이 국회에서 논의된 적…… 상정되어 있는데……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선숙 의원** 검토한 적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검토했습니다.

○**박선숙 의원** 지난해 러시아에서 우리 채외국민의 피습사건이 있었을 때 외교부 2차관이 ‘이게 국립공원에서 사고 나는데 사고 나도 환경부가 책임 안 지는데 왜 외국에서 사고 나면 외교부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발언한 적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선숙 의원** 잘 된 얘기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썄요, 어떤 취지에

서 그 당시에 했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안이 상정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국립공원이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국립공원의 입산 통제를 하지 않으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사고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집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박선숙 의원 위험한 곳의 여행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외교부가 일정한 책임을 집니다, 맞습니까?

해야 할 조치를 정부로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채택하는 문제 실패하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희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인데, 중국이 반대를 해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박선숙 의원 우리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손 놓고 있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박선숙 의원 우리가 채택하려고 노력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희는 채택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박선숙 의원 유엔으로 문제를 가져갔을 때 중국의 반대로 무산되는 일이 번번이 있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선숙 의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도 유엔으로 계속 가져가서 무산되는 것을 반복하실 예정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희들은 북한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문제는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단 토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숙 의원 생각하는 것은 생각이구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문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안보리에 있는 다른 상임이사국들도 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선숙 의원 중국하고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중국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

○박선숙 의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박선숙 의원 의견 차이는 계속 가지고 가실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계속해서, 결국은 저는 의견 차이도 좁아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겠다 그런 뜻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6자회담은 어떻게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6자회담은 지금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나라들이 우선 남북 대화가 우선 된 후에 6자회담으로 가는 프로세스가 맞겠다 해서 그런 공감대를 이루고 그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6자회담을 상당히 속도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됐는데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6자회담을 바로 시작하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선숙 의원 그러나 우리처럼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선 사과 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은 아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결국 이 문제는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하고 회담을 하는 것이 이제는 그냥 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 진전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회담이 시작되면 바로 진전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진전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북한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일단 남북 대화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선숙 의원 진정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정성은 어떻게 입증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는 북한의 진정성은 북한이 경제 문제는 우리하고 얘기를 하고 핵이나 또는 정치·군사 문제는 미국하고 얘기하겠다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모든 의제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일 때 저는 그것이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숙 의원 정부의 다른 부처 장관이나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사과를 해야 진정성 있는 것으로 보겠다’ 이런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사과”라는 표현보다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하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는 것이 저는 진정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숙 의원 책임 있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대화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했던 것입니다.

○박선숙 의원 중단됐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북한이 지금 회담장을 뛰쳐나갔는데 계속해서 회담을…… 저희들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회담의 문을 열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그러면 결정은 북한이 하는 거네요,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꼭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북한이 회담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오느냐가 중요하니까요.

○박선숙 의원 북한의 태도 변화나 회담장으로 돌아오도록 할 수 있는 우리의 조치는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정부는 나름대로 하여튼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숙 의원 그러니까 노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썬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정부도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장관님을 포함하여 총리께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 그러는데 정말 말씀하시지 않는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뭐……

○박선숙 의원 대화를 중단하고 지금 사실상 대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대화를 저희가 중단한 게 아니지요. 중단한 것이 아니라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북한이 대화에 나왔을 때 우리하고 진정하게 대화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북한도 서로 생각하고 우리도 노력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선숙 의원 외교부장관의 답변으로서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대가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단된 상황인데요. 상대가 있을 때에 우리 쪽에서 어떤 선택의 옵션들을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박선숙 의원 저쪽이 그냥 선택하도록 옵션을 넘겨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썬요.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회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려 놓고 있습니다, 북 측에도.

○박선숙 의원 제가 다른 분들하고 또 말씀 나눌거니까…… 오전에 여러 장관님들 답변 가운데에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외교통장관께서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유효하고 앞으로도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선숙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오전에 장관께서 답변하시면서 두 가지의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유효하고 지켜져야 된다’라는 취지의 답변과 전술핵 배치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모든 것을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억지력과 관련하여 답변하셨는데, 지금 전술핵 배치 문제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문제에 대하여 이것이 지금 가능하다 혹은 이것을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 방침은 확고하고 전술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 측과 협의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선숙 의원 그다음 답변이……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러나 북한 핵을 억제하기 위한 모든 대책은 강구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전술핵 배치 문제는 지금까지는 협의한 바 없는데 앞으로 협의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아닙니다.

○박선숙 의원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박선숙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군사적 역지력이 핵을 제외한 재래식 역지력 면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우위에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그것을 질, 양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겠습니까만 충분히 우위에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우위는 아닙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있기 때문에 억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같은 말씀이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 상태에서……

○박선숙 의원 우리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포기할 생각이 아니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생각이기 때문에……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유지할 생각입니다.

○박선숙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북한의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현재 권력 승계가 진행되고 있고 내부의 불안정 상황을 외부로 표출하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군비 증강이나 역지력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역지력을 확대하고 질을 높이더라도,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도발의 의도 자체를 없애지 않고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억제는 평화적 방법 억제와 대비 차원의 억제,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숙 의원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군사적 대비만으로는 억제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박선숙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키 리졸브가 ‘개념계획 5029’와 관련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관련 없습니다.

○박선숙 의원 전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박선숙 의원 4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는, 불안정 사태라는 개념이 새로 추가됐는데요. 그런 개념은 계획이나 훈련에 어떻게 반영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구체적으로 군사사항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숙 의원 바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국방부의 취재원들에 의해서 ‘개념계획 5029’가 이번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에 반영되었다라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이번 훈련이 북한 급변 사태 대응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방위에 대한 일반적인 훈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역시 추측과, 추측에 의한 기사도 일부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저는 우리 언론이 그렇게 혼자 머릿속에서 추측해서 소설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취재원이 있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박선숙 의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차차 개선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박선숙 의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개선되겠지요.

○박선숙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희는 말이지요, 군사 보안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군사 보안 등급이 아닌 것들은, 일반 사항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박선숙 의원 저는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국방부의 말이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이 아니어서 문제가 되고 또 불필요한 말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이렇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제대로.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잘못된 것은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에 대해서 언제 최초로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받았습니다.

○박선숙 의원 17일 아침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습니다.

○박선숙 의원 오전 8시경인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시간은 아마 그때쯤 됐을 것으로 봅니다.

○박선숙 의원 조찬에서요? 조찬 전에?

○국방부장관 김관진 조찬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박선숙 의원 무슨 내용을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컴퓨터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라고 개요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시다.

○박선숙 의원 잠깐만요, 내가 답변을 하고 있는데 왜 시간이 지나가요? 정확하게 하십시오. 계속 지나갔습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장관께서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 그렇습니까?

○박선숙 의원 말씀하십시오.

○국방부장관 김관진 사건 개요만 보고를 받았습시다.

○박선숙 의원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받았습시다.

○박선숙 의원 차관은 언제 보고받았는지 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전날 저녁 때 보고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차관은 왜 하룻밤 동안에 장관께 보고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단순 절도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박선숙 의원 그 판단이 맞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국방부 관련 사항은 아닙니다.

○박선숙 의원 단순 절도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건데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호텔에도 단순 절도 사건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박선숙 의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일행이 묵는 숙소에 기무사 요원들 배치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안 했습니다.

○박선숙 의원 국군기무사령부령 제3조1호 ‘가’ 목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배치하셨어야 정상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지 않습니다.

○박선숙 의원 국외·국내의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첩보 수집, 작성, 처리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사항과 그 사항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박선숙 의원 그러면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들어와 있을 때에 국군기무사가 관련해서 어떤 행동을 했어야 정상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문제는 여러 가지, 특사단의 일부로서 인도네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기무사하고 관련한 문제가 아닙니다.

○박선숙 의원 그러면 기무사는 전혀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경로로도 접근한 적이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습니다.

○박선숙 의원 지금 이 사건은 어디에서 수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조사?

○국방부장관 김관진 경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오로지 경찰만 조사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더 이상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박선숙 의원 국방부 관련자들도 출석해서 조사에 응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닙니다.

○박선숙 의원 비정상적입니다. 관련자가 정부 기관 여러 곳인데 경찰이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나중에 총리께 여쭙 보겠습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요.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통일부의 역할이 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통일부는 통일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립하고 또 집행하는 정부의 기관입니다.

○박선숙 의원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르면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관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한 1조 1000억, 2000억 사이에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박선숙 의원 2009년부터…… 2008년 예산 대비해서 매년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돈이 줄어들었냐고요?

○박선숙 의원 출연금.

○통일부장관 현인택 남북협력기금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선숙 의원 총액은 늘지요. 그런데 매년 들어가는 출연금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한 35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그래서 3000억씩 줄어서요. 줄었다고요. 출연금 자체의 액수를 줄였습니다.

통일부 예산 많이 늘리셨지요, 장관 오셔서?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선숙 의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퍼센티지로?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 작년 예산은 한 27% 늘어났고요. 올해 예산은 한 33%가 늘어났습니다.

○박선숙 의원 2010년에 1542억이었는데 2011년에 2056억…… 통일부가 예산이 적은 부서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주 적습니다.

○박선숙 의원 저는 통일부 예산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하지요. 어디다 쓰실 겁니까, 500억 늘어난 것?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예산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육에 관한 예산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세분석국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정보 취합할 수 있는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느라고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 세 군데가 아마 예산이 제일 많이 늘어났을 걸로 봅니다. 그중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예산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선숙 의원 이탈주민 예산 늘어나는 것은 이

탈주민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는지 따져 보면 될 일이고요.

이 통일교육 내실화 강화 이렇게 해 갖고서는 상당 액수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통일부장관 취임하신 이후에 통일부의 업무를 볼 때 이 통일교육이 도대체 무슨 통일교육인가 의구심이 생겨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통일교육 예산 중에 특히 최근에 IPTV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알려 주기 위해서 쌍방향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것은 디지털시대가 됐기 때문이에요, 통일교육도 과거처럼은 되지 않아서 그야말로 그런 새로운 내용들을 만드느라고 그런 데 예산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박선숙 의원 제가 꼼꼼하게 나중에 더 따져 보겠습니다만 정세에 관한 문제,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학교 통일교육 강화, 방금 말씀하신 IPTV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이 지나치게 이념 편향적 성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점검을 하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지 않고요. 지난해 이미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아주 소상하게 여야 의원님들이 다 참여해서 가지고 그 내용을 검토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선숙 의원 실제 집행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이념 성향이 강한 분들에게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점검하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개성공단 여쭙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개성공단,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생산액이 2009년 대비해서 2010년에 한 26% 늘어난 것 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물론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눈물겨운 얘기지요. 정부가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썬, 하여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개성공단 기업의 숫자가 지난 2, 3년 동안에 한 30여 개 기업이 늘어났습니다. 한 91개에서 지금 122개 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생산액수도 상당히 2, 3년 동안에 늘어났습니다.

○박선숙 의원 그런데 정부가 지금 여전히 관리

인력 상주나 자유통행 문제 잘 안 해 주잖아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그것은……

○**박선숙 의원** 상주인력도 지금 줄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개성공단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우리 상주인력들의 신변안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국민들도 염려하시고 사실상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우리 그야말로 근로자, 국민들도 사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이 구조적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만 그런 신변안전 문제를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년에 어려운 일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개성공단은 지금 그대로 잘 지속이 되고 있고, 다만 인원 문제에 관해서는 어쨌든 신변안전 문제를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그러면 500명 규모면 신변이 안전하고 그 이상이 되면 안 안전하고 이렇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딱 500명이다, 600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간……

○**박선숙 의원** 지금 그렇게 체류 인원을 축소해 놓으셨는데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관점에서 지금 그런 노력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정부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숫자를 줄였는데 500명이 있으면 안전하고 500명이 넘어가면 불안하고 그러나 그 말씀입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인원 문제는 관리의 관점도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 자료 좀 보여 주세요.

지금 공단 입주기업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지금 취해 놓은 신규 진출·투자 확대 불허 이런 조치를 철회해서 관리인력 상주와 자유통행 빨리 풀어 달라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천안함 폭침 이후로 전반적으로 5·24조치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전체 남북교역을 하는 그런 기업체들의 활동도 지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개성공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신규 투자는 아직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원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그간에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이런 차단조치라든가 또 제한조치 때문에 우리 일부 기업들이 사실 좀 피해를 받고 있어서 저희 정부가 개성공단을 포함해서 남북교역 업체들 전부를 다 해서 자금이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에게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또 상당수의 기업체들이 요청을 해 와서 한 386억 정도, 거의 400억에 가까운 돈을 지금 대출을 하고, 이런 보완책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숙 의원** 그것은 저희도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그것 갖고 부족합니다. 그것 갖고 부족하고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600억 정도의 자금 여유를 갖고 했습니다만 지금 되도록이면 그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다 대출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들어온 것들을 저희들이 즉 심사를 해서 가능한 한, 말하자면 많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0억 가까이 대출이 됐고, 여력이 있으니까 또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협력기금법을 바꿔 가지고 용자하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썬, 어떤 식으로 될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로서도 충분히 기금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박선숙 의원** 기금을 사용은 못 하지요, 현재.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러니까 그 기금에서 지금 다 대출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600억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해 주고 있으니까 기금의 개정 문제하고는 큰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숙 의원**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군사적인 긴장을

해소해 줘야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부가 할 몫이고 그리고 인원 줄여 놓은 것 이제 늘려 주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제가 오전에 죽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은 통일부장관께 향후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더 질문드릴 게 없습니다. 다만 제가 드릴 말씀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박선숙 의원** 총리,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께서 인도네시아 장관 관련해서, 국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게 경찰조사를 말씀하신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맞습니다. 경찰 수사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박선숙 의원** 아까 국방장관 답변 들으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선숙 의원** 관련된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받은 적이 없다는데요, 참고인으로라도?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만 알지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박선숙 의원** 경찰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총리가 어디서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를 안 받으셨는데요, 경찰이 조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을 불러다 경찰이 조사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사실상의 문제지 경찰에서는 조사를 해야지요.

○**박선숙 의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총리께서 직접 실질적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이 국제적 망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부의 기강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점검하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선숙 의원** 제가 총리님을 포함하여 장관들께서 답변하는 걸 들으면서 북한의 진정성이란 단어를 거의 수십 번씩 말씀하세요.

진정성이 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까 외교장관께서도 말씀했듯이 결국은 남북한이 상생협력 공유하는 그러한, 남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내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하는 취지의 진정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서 작년에 생긴 이러한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도 북한의 책임 있는 반성과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 하는 취지입니다.

(홍재형 부의장, 박희태 의장과 사회교대)

또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끈질기게 북한이 그런 생각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은 계속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박선숙 의원** 답변하신 내용이 말씀만이고, 다른 무엇인가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박선숙 의원** 들어가십시오.

외교·안보 분야의 질의에서 총리와 장관들께서 북한의 태도 변화만을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에 목을 매고 기다리는 전략으로는 대한민국에 어떤 위험과 위기가 닥쳐올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 남북관계특위에서 제가 통일부장관께 드렸던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전략으로 정부와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 피해는 우리 국민과 군대에 가 있는 생때같은 우리 아이들이 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인지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2년까지 정권도 바뀌지만 북한도 시간이 없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피해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생각을 바꾸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희태** 박선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 출신의 한나라당 황진하 의
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震夏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 파주 출신의 황진하 의원입니다.
현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합
니다. 북한의 내부사정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제2,
제3의 도발이 우려되고 중국이 북한 편을 계속
들고 있어서 한반도 긴장고조 가능성은 더욱 심
화되고 있습니다.

대책이 무엇인가? 오늘 대정부질문의 핵심 포
인트입니다.

오늘 질문은 제가 몸담았던 39년간의 군 생활
을 생각하는 군 출신으로서 그리고 접경지역 파
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 입장으로
그리고 안보를 걱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
리고 정부에 고언과 제언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
다.

국방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관진 장관님께서 청문회 때부터도 그렇고 국
민들에게 많은 기대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알
고 계시죠?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黃震夏 議員**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안보상황을 극복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 역
할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黃震夏 議員** 지금 2월 28일서부터 시작이 되
는 키 리졸브 훈련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북한
의 제2, 제3의 도발이 새로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장관께서 판단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가능
성 그리고 우리 군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국
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분
석 해 봤을 적에 금년 봄은 북한이 도발할 수 있
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천안함·연평도 두 사건 이후 여러 가
지 미흡한 점을 보완했습니다. 적의 도발가능성,
도발유형 계획을 세워 놓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
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도
록 하겠습니다.

○**黃震夏 議員** 대책에 대해서 확고하게 돼 있
다고 자신하시고 국민이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黃震夏 議員**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보태세는 국민총화·군사력 그
리고 국제적인 공조노력 이 세 가지 축으로 이루
어진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국민총화와 국론분열
의 방지 그리고 확고한 민·군 관계, 이것은 아
주 핵심적인 기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동의합니다.

○**黃震夏 議員** 그런데 작년도에 일어났었던 천
안함 사건이라든지 연평도 포격사건을 보면서 저
는 군 출신으로서도 그렇고 국민으로서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지적하
고자 합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黃震夏 議員** 먼저 그 자위권과 교전규칙에 관
한 문제입니다.

우리 군은 휴전 이후 약 58년간 지내면서 정전
협정을 준수하는 데, 그에 따른 교전규칙에 충실
한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맞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黃震夏 議員**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교전규칙에
익숙해져 있어서,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 장병
이 죽고 다치고, 국민이 죽고 다치고 하는데도
'교전규칙, 교전규칙'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다소 치우친 면이 있었습
니다.

○**黃震夏 議員** 장관께서는 유엔헌장 속에 나와
있는 자위권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알고 있습니다.

○**黃震夏 議員**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국방부에서 나온 이 책자 '전쟁법 해설서'
이걸 몇 차례 읽어 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잠깐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엔헌장 51조에 보게 되면 "무력공격이 발생
한 경우에 자위권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
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黃震夏 議員 그리고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정전교전규칙상에서 보게 되면 자위권 행사를 “필요하고 가능한 일체의 수단을 사용해서 일체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되어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黃震夏 議員 그다음에 이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즉각적인 위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黃震夏 議員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에 교전, 교전규칙 따지면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적의 도발 의지를 말살해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군의 이제까지의 관행, 분명히 고쳤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작년 연평도 도발 이후에 그 문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黃震夏 議員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장병의 생사를 가늠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자위권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장병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걸 강조해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黃震夏 議員 두 번째는 군사작전 보안 문제입니다.

군사보안은 군대의 생명이고 작전 승패의 핵심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군사보안을 지켜서 작전 승리를 하고 우리 장병들의, 우리 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군사보안 문제가 너무나 해이해져 있었고 너무나 이완이 됐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작전보안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며 중요성이 큼니다. 보다 정신적 차원에서 작전보안을 철저히 시키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黃震夏 議員 심지어 요새 어떤 군사 관련이든지 북한의 도발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든지 지난번에 있었던 해적 소탕작전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 매스컴에 나오는 얘기는 완전히 스포츠 중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적에게 우리 기도를 전부 다 노출시킬 정도로 그렇게 보안이 안 지켜지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작전을 성공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이것은 시정을 해 주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장관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黃震夏 議員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해서 작전보안을 못 지키게 되면 모두 죽고 망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알겠습니다.

○黃震夏 議員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리께서 나오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국론분열 방지와 확고한 민·군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 안보의식을 제고하고 민·관·군의 통합방위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黃震夏 議員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있었던 천안함 사건 그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도 우리 국민 중에는 일부 또 정치인 중에서도 일부가 조사 결과를 못 믿겠다고 하면서 북한 소행이라는 것은 유보를 하고 계속 의구심만 증폭시키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국민들이 처음에 의심스러웠던 그런 생각도 많이 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黃震夏 議員 이러한, 국론을 자꾸 분열시키고 자꾸 의혹을 증폭시키고 하는 등의 행위는 결국 이적행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적행위와 같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이 사회혼란을 가져오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특정한 범규에 위반된다고 한다면 그 법에 따라서 엄중히 처벌을 할 것이고 또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사회 분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 공보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행동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렇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위법행위가 있으면 엄정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黃震夏 議員** 그래서 국론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만반의 조치를 계속적으로 보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黃震夏 議員** 그리고 확고한 민·군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느낌은 군이나 국방부가 대부분 해야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이나 국방부 혼자서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민·관·군 통합방위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러한 대책회의도 갖고 했습니다.

○**黃震夏 議員** 그런데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더 강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전방지역, 접경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 고통이 60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군에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부족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뭘 하나 개발하려고 그래도 이것저것 다 걸려 있고 그다음에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해도 군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작전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수도권에 가깝다고 그래서 수도권정비법에 걸리고, 뭐 등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黃震夏 議員**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또 아니면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특히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국가 안보도 고려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국가재정 여건도 고려를 하고 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한 대폭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한 범위에서부터 차근차근 개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黃震夏 議員** 제가 지역을 다니거나 또 아니면 철원·연천 전방지역을 다 다녀 보면 도대체 내가 전방에서 태어난 것이 무슨 죄냐, 내가 전방 지역에서 사는 게 무슨 죄냐, 60년 70년 되도록 이러한 피해를 보고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데 왜 정부는 해소해 주지 않느냐,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한들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이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시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여러 의원들이 접경지역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안해 왔습니다. 정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도우셔서 국회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黃震夏 議員**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그 법이 하루속히 통과되기를 바라고 정부로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黃震夏 議員**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되면 그 땅을 아예 국방부가 사 버리거나 우리 정부가 사 버리거나 또 아니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되면 그래도 최소한의 면세를 시켜 주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전방에 사는 분들이 억울함이든지 괴로움이 없도록 하는 것을 꼭 정부가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黃震夏 議員** 약속을 해 주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재정여건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큰 방향을 가지고 가능한 범위서부터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黃震夏 議員** 계속적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최근에 전방지역은 많이 해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파주지역의 경우 서울에서 가깝다고 그래 가지고 약 70% 정도밖에 해소가 안 되고 아직까지도 30%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해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해제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국토부로 하여금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黃震夏 議員** 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 운정3지구라고 해서 1조 2000억의 빚을 진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방청석에는 우리 교하 주민들이 잔뜩 와 계

습니다. 총리께서 참고를 하셔서 이런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파주 운정 3지구는 그쪽 지역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정부가 주도해서 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LH공사가 부실로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도표를 보십시오.

파주 운정3지구가 중단됐을 때는 국가 공신력이 실추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현재 직접적으로 1조 2000억의 빚을 진 분들은 약 1700세대라고 합니다.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이 약 20만 명이 됩니다.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교통대란은, 그것은 아주 불 보듯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또 그리고 무슨 배수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교하 3지구까지 전부 되어 가지고,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런 기반시설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걸 태반도 못 쓰는 과잉투자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만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LH공사의 재무 여건 때문이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황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마는 지역주민 그리고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마 LH공사 측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 의원님의 그런 취지를 잘 전달을 해서 이와 같은 주민들의 요구를 되도록이면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黃震夏 議員** 그게 민·군 결속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방 지역에서 50~6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좀 정부가 주도해서 개발을 하나 보다' 믿고 대토를 마련하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를 믿었던 사람들이 전부 허탈해 하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를 못 믿게 되고 군사작전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정부에 대한 신뢰, 민·군 간의 결속 상태가 해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 차원에서 이것을 같이 검

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黃震夏 議員**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경부고속도로라든지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든가 항만을 건설하든지 비행장을 건설하게 되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최초의 발언을 한 그러한 대심도 철도라고 하는 GTX가 전방지역까지를 가지 않고 기껏 수도권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전쟁 발발 시에, 유사시에는 수많은 보충 병력이 전방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고 수많은 보급물자가 전방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도심지를 통과해야 되는 철도를 전방까지 기왕 하는 길에 해야지 그것 안 한다고 그러면 안보적인 검토가 안 되어 있다, 통일 차원에서 이것은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하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B/C, 경제적 타당성 이것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보 태세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총리께 강조를 해 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현재 파주-수서 구간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합당하게 검토를 하겠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보에 관한 상황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黃震夏 議員** 그래서 단순히 경제성,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또 휴전 이후 60년 이상이 가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태평성대가 온 것처럼 안보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국토 건설이라든지 인프라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정부에서도 이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화여대가 파주로 온다고 그러다가 이화여대는 돈을 덜 내고 싶고 국방부는 아무래도 돈을 많이 받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척이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국방부장관을 만나서 이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가 댔든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같이 힘을 좀 써 주셔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반환공여지 그것을 팔아 가지고 나온 돈을 가지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보태 써라, 거기에서 재원을 마련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남아 있는 공여지 판 돈만 가지고 보충을 해야 되는 중압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군당국이고 국방부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용산기지 같은 거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던 것은 그것을 시유지화하거나 아니면 공원화하면서 별도로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 염출을 안 했다 말씀이지요. 그러면 왜 파주 지역이라든지 기타 남아 있는 지역만 피해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쪽의 가격 차이가 커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마 지난번에 관계자들을 불러서 의견도 듣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黃震夏 議員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적극 좀 협조를 해 주시고 정부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경기도와 파주시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반드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총리께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경기도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黃震夏 議員 그래서 통일의 관문 파주 또 우리 접경지역에서 고생을 하고 계신 접경지역 주민들이 정말 이제까지 고생했던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시원한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黃震夏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현재 남북한 간의 갈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보고 또 우리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걱정되

는 것이 바로 NLL과 북한 핵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黃震夏 議員 지금 원본에는 나와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6자회담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도 6자회담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협상의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黃震夏 議員 그런데 6자회담이 지리 지리하게 끌기만 하지 아무 답이 안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세계에서 걱정을 하고 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히 비핵 지대화를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핵우산 보장하에서 우리가 핵은 안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黃震夏 議員 그런데 거꾸로 북한은 왜…… 중국이든지 러시아보고 ‘핵우산을 보장하라’ 해 놓고 핵 포기하라고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면 어떻겠나, 그것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黃震夏 議員 그래서 중국도 설득을 시키고 러시아도 설득을 시켜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黃震夏 議員 기타 사항은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상임위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黃震夏 議員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통일부장관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부가 넘어가고 카다피의 리비아가 위태위태합니다. 북한이 그런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썬요, 정권 당국은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걸로 봅니다. 주민들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黃震夏 議員 북한 지도부가 이것을 알고 변화를 시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뭐가 있겠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하여간 정부는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黃震夏 議員 시간이 없어서 전부 질문은 못 드리겠는데요,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겠습니다.

○黃震夏 議員 들어가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안보의 초석은 국민총화와 민·군 결속입니다. 민·군 관계의 결속을 위한 정부의 결단과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희태 존경하는 황진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조순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舜衡 議員 먼저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에 대해서 질문 또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외교관계 그런 것 등등을 참작을 해서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시종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총리께 좀 진상을 여쭙어 보려고 했는데 외교관계가 정 그러시다면 질문 그만두겠습니다. 그 대신에 총리께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정원 조직에 대한 전면 쇄신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으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의원님 아시다시피 국정원 관련 업무는 총리하고는 별개의 독립적인 업무입니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총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책임 있게 국정원장을 포함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도 솔직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舜衡 議員 아니,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것을 제가 몰라서 여쭙어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관여 못 하시겠다면 그것은 정말 형식논리입니다. 보십시오. 헌법 제87조제3항에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趙舜衡 議員 헌법상 국무위원까지도 해임을 건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국정원장 해임을 건의 못 하십니까? 그리고 국무총리는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청와대에 있는 참모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바로 총리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국정원장 인사는 당초부터 잘못된 인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초부터 인사를 잘못 거둬두고 지금까지도 인사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까지 인사 잘못 중 가장 큰 잘못 중의 하나는 바로 이 국가정보원장 인사입니다. 원세훈 원장은 정보 업무와는 전연 관계도 없는, 연고도 없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 된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국가정보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 시간이 없어서 얘기 다 안 하겠는데 지금 국정원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 총리님께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걸 누가 합니까, 지금?

아니, 어제 “대통령 권한이 강력하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국무총리 김황식 예.

○趙舜衡 議員 바로 이겁니다. 총리님께서 그런 형식논리를 내세우셔서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이러니까 대통령 권한이 강력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헌법에 총리, 국무위원들 말이지요, 전부 다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행사들 안 하고 자기 임명해 준 임명권자라고 그래서 눈치보고 말이지요, 몸 사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답변 못 하실 텐데 좀 심사숙고하셔서.....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드리는 말씀.....

○趙舜衡 議員 아니, 조용히 하세요.

독대할 때 조용히 좀 건의를 하시라고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이 자리에서 법률에 반하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는 취지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많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趙舜衡 議員** 법만 가지고 지금 총리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공식적인 자리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趙舜衡 議員** 그러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趙舜衡 議員** 심사숙고 하시고 조용하게 한번 건의를 하세요.

지금 정부에서,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 부분도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남북정상회담을 이 정부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실시하려고 한다든지 안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趙舜衡 議員** 이것도 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북한의 위장 대화·평화 공세에 철저히 대처하고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서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또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 동안에 두 차례의 북한 도발에 대한 담화에서 분명히 북한에 요구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제조건이 하나도 충족되고 있지도 않은데 계속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한 듯한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말이지요, 대통령이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총리께서라도 중심을 잡으셔서 이것도 또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국무총리 김황식** 남북정상회담은 현재 회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뭐 구걸하거나 또 억지로 하려고 하

는 의도나 상황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趙舜衡 議員** 총리께서 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총리도 소외하고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정보원 내세워서 지금 비밀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이 얼마 전에 미국을 방문했고 그러지 않습니까? 총리께서 지금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소외되고 그런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지금은 무슨 남북대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시고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 전쟁범죄 입증을 하기 위한 본조사에 착수하고 또 머지않아서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한다는 것 들으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실사단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파견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ICC 검사국에서 관심을 갖고 소정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趙舜衡 議員** 그런데 우리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장관한테 이따 질문할 텐데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 12월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압니다.

○**趙舜衡 議員** 그렇다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렇게 조사에 착수를 하고 있다면 마땅히 총리께서는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이 수사하도록 지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알기로는 그 절차가 ICC의 검사국에서 주도적으로 행하는 절차로 알고,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협조나 나중엔 그 집행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내가 같이 협력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趙舜衡 議員** 아니지요. 이 법률이 지금 시행되고 있으니까, 국내법으로, 이거 당연히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당장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북한 김정일 집단의 전쟁범죄 사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또 통일 후에라도 처벌을 위

한 증거 확보를 지금 해 놓아야 됩니다. 이것도 또 검토를 해 주세요.

총리께서는 들어가 주십시오. 됐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핵 무장론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로부터 많은 질문이 있었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부 측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충실히 지켜 왔고 또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되어 있고,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아직도 준수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이 20여 년간 말이지요 제네바 합의, 6자회담 등 노력했으나 지금 북핵 폐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임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엣그제 유엔 안보리에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보고서 채택조차 무산됐습니다. 이것 들으셨죠?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趙舜衡 議員 러시아까지 찬성을 했는데 중국이 반대해서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핵탄두 장착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중대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김정일 집단의 자비심에 의존해서 대한민국이 하루하루 인질 상태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당당한 독립국가로서 핵 주권을 확보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전문가들 그리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들이 북한 핵 무장에 대해서는 가장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도가 대한민국의 핵 무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학술적인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비핵화 정책 이걸 유지를 할 것입니다.

○趙舜衡 議員 아니, 학술적인 견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학술적인 견해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해서 한 얘기인데……

아까 확장억제위원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의 핵우산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趙舜衡 議員 믿을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趙舜衡 議員 믿을 수 있어요?

나는 그것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제정치, 국제사회의 현실은 대단히 냉엄합니다. 프랑스가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도 마다않고 독자 핵 무장한 이유가 됩니까? 그 배경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방부장관님께서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아까 제기된 전술 핵무기 재배치 그리고 핵 무장에 대해서 연구 검토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 이것 옳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趙舜衡 議員 그러면 국방부에서 과연 핵 무장에 대해서 연구 보고, 보고서 뭐 한 게 있습니까? 있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趙舜衡 議員 어렵죠?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趙舜衡 議員 하세요, 그것?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趙舜衡 議員 만약 없다면 그걸 마련하시고 말이지요, 이건 연구 검토해야 됩니다. 핵 무장, 이게 금기 사항이 아닙니다. 이제 바로 우리 현실 앞에 닥친 문제예요.

그다음에 추가 도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 서해 5도에 대해서 이번에는 포격이 아니라 ‘기습 상륙, 점거한 후에 휴전과 협상을 즉시 제의한다, 요구한다.’ 이런 시나리오로 전개된 데는 그런 군사전문가들의 예상이 있습니다.

지금 대비책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여러 가지 유형의 시나리오 중의 하나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趙舜衡 議員 작전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안 해 주셔도, 서해 5도에서 역시 말이지요, 기습 상륙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으로서의 비상한 결의와 각오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잘 알겠습니다.

○趙舜衡 議員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도발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의 외교적 대응조치가 아주 무기력하고 소극적이고 말이지요, 일관성도 없고 제대로 하지 못했다든 그런 비판과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 애

기 좀 들으셨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趙舜衡 議員 우선 왜 유엔 안보리에 연평도 포격 사태를 정식 제기 안 한 이유가 뭐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몇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은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 일단 국제적으로는 유엔에 회부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로서도 그것으로써 종결을 짓는다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해서는 그 후에 아직 종결이 지어지지…… 계속해서 북측에서 도발의 우려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趙舜衡 議員 연평도 포격 도발은 천안함 폭침 사건과 또 다릅니다. 이것은 북한군의 정규군에 의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무력 공격입니다. 이것은 북한도 회원국인 유엔헌장 2조4항에 근거한 무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아주 나쁜 선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11월 29일에 유엔안보리가 열렸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열렸습니다.

○趙舜衡 議員 그때 말이지요, 미국·영국 대사들이 강력하게 북한을 규탄하고 제재하자고 요구했는데 그날 우리 한국대표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저희가 안보리의 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장에는 저희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趙舜衡 議員 아니, 발언권을 요구하면 주지 않습니까, 읍서버로 얼마든지?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지 않습니다.

○趙舜衡 議員 당사국인데 왜 못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쪽에서 초청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참석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趙舜衡 議員 그게 외교 아닙니까?

아니, 당사국의 대표들은 다 참석해서 발언하게 돼 있어요. 그런 선택이 많습시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선택이 있기는 있습니다.

○趙舜衡 議員 우리 국군 장병들,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또 목숨을 잃으면서 대한민국

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장관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말이지요 비록 군복은 안 입고 총은 안 들었으나 대한민국의 안보와 생존을 지키는 데는 군인과 차이가 없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각오로 저희들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趙舜衡 議員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 그러한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趙舜衡 議員 장관께서 술선수법을 하셔야 돼요. 독려를 하세요, 좀!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舜衡 議員 특히 유엔에 있는 외교관들 말이지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내가 뉴스를 좀 봤는데 북한 외교관들은 보니까 영어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게? 영어도 잘하면서 아주 당당히 발언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외교관 발언하는 것은 내가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도대체가. 이래 가지고 됩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사가 되어야 돼요.

참, 공관장회의 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趙舜衡 議員 누가 그런 얘기 좀 했어요, 전사가 되라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제가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趙舜衡 議員 국제형사재판소에 왜 아직도 제소를 안 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이 문제는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미 조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趙舜衡 議員 그러시면 됩니까? 이것 ICC에서 조사 착수하게 된 계기를 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趙舜衡 議員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라고 국내의 50개 보수단체가 도발이 일어나자 옛세 만에 제소를 했어요, 고발을. 그런데 ICC에 접수된 진정서 고발이 9000여 건이 되는데 예비조사 착수하는 건 딱 14건뿐입니다, 14건. 여기에 들어갔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趙舜衡 議員 아니, 민간단체가 이러는데 정부

가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거나 같이 하거나 이렇게 했더라면 국제사회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컸을 겁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형식논리를 가지고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이것은 형식논리가 아니고요, 이미 예비조사 개시가 된 이후에 우리 정부가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趙舜衡 議員 어떻게 ICC의 조사 착수 이게 당장의 실효성은 없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에 미치는 그 파급 효과는 큰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趙舜衡 議員 인정하시지요, 상징성?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趙舜衡 議員 그리고 또 하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당사국 중의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서로 협의를 한다 그랬어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趙舜衡 議員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행위 아닙니까, 연평도 포격이?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래서 그 후에 한미 간에……

○趙舜衡 議員 그러면 제2조에 의한 협의를 한적이 있어요, 외교부에서?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지속해서 한미 간에……

○趙舜衡 議員 아니, 제2조에 의해서 한 협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협의는 여러 가지 했겠지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 후에 일련의 훈련 과정이라든지 또 미국 관료들과의 협의를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趙舜衡 議員 아니,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를……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희들이 협의하는 것을……

○趙舜衡 議員 발동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조약을 발동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趙舜衡 議員 이 상징성, 효과가 얼마나 큼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지지요.

통일부장관 나오세요.

통일부장관께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거의 없게 됐는데요.

우선 북한 인권법이 지금 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趙舜衡 議員 대북정책 집행에 사실은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趙舜衡 議員 이것은 물론 국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정부도 그냥 가만히 좌시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내가 언제 장관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의원입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정부입법으로 했어야 돼요.

(박희태 의장, 홍재형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헌법 81조에 보면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세요.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을 하거나 서한으로 말이지요, ‘인권법 제정해야 된다’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인권법을 제정 안 한 것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럴 수 있는가, 국회가.’ 그렇게 좀 하시라 그러세요. 하시겠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하여간 우리 조순형 의원님께서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부가, 하여간 정부도 아주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舜衡 議員 아니, 그렇게 다각적인 노력하실 것 없어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여간 정부 측 답변을 보면 다각적이고 종합적이고 말이지, 뭐…… 참 그런 게 많더라고요.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몇 가지 더 있는데, 어떻게 여기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일부장관 이 네 분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보를 책임지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군장병들 목숨을 걸고, 목숨을 잃으면서 대한민국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네 분이 말이지요, 목숨을 건다 이런 각오와 결

의로 나서셔야 돼요.

제 발언시간 끝났지만 내가 총리 각오와 견해 듣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제가 당부합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알겠습니다.

○**趙舜衡 議員** 대통령 혼자 맡기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네 분들이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자꾸 우왕좌왕하니까 이 안에서든 원칙과 있고 유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 그냥 당부드리고 내 발언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조순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존경하는 정옥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議員**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은 지금 바로 약 한 달 전에 평양에서 불과 40여km 떨어진 평남 덕천시의 북한 어린이들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더미를 뒤지는 꽃제비 들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 민족입니다. 중국과 북한 접경지대가 아니라 평양에서,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수원 거리의 어린이들의 모습입니다.

올해로 이명박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도전입니다. 인민을 굶겨서 어린이들을 쓰레기장으로 내몰고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임산부를 벌거벗겨서 천인공노할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김정일 정권, 그러다 보니 북한 치하에서는 그동안에 상상도 못 했던 생계형 시위 소식도 들립니다.

우리를 향해서는 전대미문의 도발에 이어서 3차 핵실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중동의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에서 휘몰아치는 거대한 모래 폭풍은 동토의 땅 북한에서는 미풍도 안 됩니다마는 우리에게는 변화에의 대비, 북한 급변상황에 대한 준비가 절실합니다. 한반도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사막의 모래바람이 무색할 가공할 태풍이 될 것입니다. 변화의 기폭제는 바로 북한 스스로가 만들 겁니다. 얼마나 제대로 준비하느냐가 이명박 정부 남은 2년의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역사상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참 자긍심을 키우면서 아프리카 등지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 기여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머리 넘어 북녘 땅에서 저런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鄭玉任 議員** 어떻습니까, 김정일 정권에 대한 당근이 아니라 바로 저런 어린이들, 북한 인민을 위한 효과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무슨 계획을 세웠으며, 또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북한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저런 고통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 없이 인도적인 지원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상응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께서 답변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급변상황 발생시에 대한 준비는 틀림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2012년에 총리실은 세종시로 내려가게 되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鄭玉任 議員** 그러면 만약에 급변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다 가정했을 때 총리의 일차 임무가 무엇입니까? 예컨대 이제 북한 도발 내지는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여러 가지 방호·구호 이런 것에 대한 총괄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 총리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다음에 이러한 것이 어떻게 조정·통괄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총리는 기본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의장이고, 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이러한 급변상황 시에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안보분야의 위기는 주로 대통령께서 안전보장회의를 관장하시고, 그밖에 재난분야에 대해서는 총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총리실이, 총리가 세종시로 옮겨 가는 그런 모든 상황을 전제로 해 가

지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鄭玉任 議員 이 와중에 지금 정보기관 직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 때문에 국정원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鄭玉任 議員 2007년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샘물교회 피랍사건 당시에 김만복, 선글라스 맨을 다시 한번 연상을 시키면서 국정원이 또 한번 굴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연 북한 상황에 대해서 정보당국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특사단 상황과 관련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현재 경찰 수사 진행중이고 또 우방국과 관련해서, 외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국민 사이에 상당히 걱정하는 문제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적절하게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기관에서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기울이고 있습니다. 잠깐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鄭玉任 議員 기다리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나름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종의 조치가 있을 겁니다.

○鄭玉任 議員 이 안보·외교·통일 정책에서 중요한 거는 역할 분담입니다. 국방이면 국방 또 통일부의 대화, 인권, 그리고 주변부 관리 이런 것이 철저히 돼야 되는데 대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많은 의원들께서, 어떤 분들은 대화하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현재 김정일 와병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계승한다는 그 김정은이라는 젊은이는 세습의 속도전에도 불구하고 그 역량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악마 같은 존재와도 대화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의 총리급에 해당할 수 있는, 예컨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총리께서 직접 총리급 회담을 제안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과거와 같이 우리가 대화를 한다 그래서 대화의 값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동안의 북한 도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또 상생번영, 그다음에 통일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공세적으로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정부는 남북대화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고 또 의미 있는 남북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변화된 모습을 최소한도는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정도의 여건만 성숙이 되면 모든 차원의 대화는 가능하다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총리가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시도할 수 있는 문제다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변해야 됩니다. 변화를 유도하도록 또 정부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鄭玉任 議員 북한의 변화라는 거는 도발에 대한 사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노력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몫도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행정부가 북한 핵의 존재를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鄭玉任 議員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차 핵실험까지 겪었습니다. 만약에 3차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의 로드맵이 무엇이냐라는 오전의 정몽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확장억제위원회 또 포괄적 능력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鄭玉任 議員 3차 핵실험을 하는데 논의해서 언제 해결합니까? 오죽하니 원로 정치인들이 핵무장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갑갑한 심정을 토로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핵 억지 로드맵이 과연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잘 아시겠지만 북한 핵 보

유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한미 간의 공동 원칙입니다.

핵 포기 압박을 지속하면서 핵 억지력을 강화시키는 방편으로서 핵확장억제정책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고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방법과 수단이 논의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議員 지금 ‘논의될 것이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1991년에 우리나라에 남아 있던 전술핵무기 100여기가 마지막으로 철수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鄭玉任 議員 그렇다고 그래서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鄭玉任 議員 전 세계에 전술핵무기, 미국이 몇 개나 배치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2010년도 발표가 있었는데 개략적인 발표고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정보 공개하지 않으셨는데 이미 500기가 배치되고 있다고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또 한다면, 우리는 비핵 원칙을 고수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옹호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鄭玉任 議員 핵무장은 하지 않더라도 1991년에 미국이 철수시킨 전술핵무기를 갖다 놓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확장억제위원회에서의 논의보다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3차 핵실험 이후에는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鄭玉任 議員 어떻게 변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희가 핵 억지력을 완전히 갖추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鄭玉任 議員 그러면 지금 제가 제안드린 전술핵무기의 재배치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여러 가지로 국제적으로 협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鄭玉任 議員 단정하지는 않지만 부정하는 것도 아니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

○鄭玉任 議員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러면 그렇게 답변으로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전양면도발에 대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 5도상의 작은 섬을 갑자기 점령해 가지고 민간인들을 인질로 삼은 다음에 협상하자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권력이 정말 예측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것은 미국과 우리와의 어떤 대응 전략 내지는 적극적인 대응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이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반격을 상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하나의 저희가 일어날 수 있는 도발 유형의 하나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전면전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전면전에는 별도의 전면전에 따르는 징후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런 도발도 한미 간에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도발 상황에서는 평시작전통제권이 가동됩니까, 전시작전통제권이 가동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평시작전통제권이 가동됩니다.

○鄭玉任 議員 평시작전통제권은 우리에게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鄭玉任 議員 그러면 국지전에서 평시작전통제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핵을 가진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과연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리라 확신하십니까? 동맹의 이름으로?

○국방부장관 김관진 핵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시기와 공격이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저희가 북한이 국지적으로 도발했을 적에 핵을 의식한다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핵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鄭玉任 議員 지난번에 통상적인 사격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대응사격은 없었습니다. 마는 긴장이 상당히 높아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에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 온 정기 사격훈련의 계획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러면 만의 하나라도 북한의 예

상되는 그런 반발에 대한 대비도 확고하게 갖춰져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확신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鄭玉任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간안보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안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교역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혹시 그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희들이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칠레, 싱가포르 그다음에 아세안 등과 했는데 칠레와는 4배 교역이 늘었고요 싱가포르와는 2배, 그리고 EFTA와는 3배, 또 아세안과는 1.5배 이렇게 늘은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지금 FTA 상대국 전체들이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습니까? 우리 전체 GDP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2%입니다. 그런데 이 FTA 상대국이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15%가 약간 안 됩니다.

○鄭玉任 議員 한미 FTA와 관련해 가지고 아직도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픽업트럭과 상용차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 FTA상의 픽업트럭이 톤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4.5t 이상은 아마 화물차로 되고 그 이하는 승용차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예, 맞습니다. 픽업트럭은 4.5t 미만의 경트럭으로 승용차로 분류가 되고요. 상용차는 바로 버스와 화물차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鄭玉任 議員 두 번째로요. 한·EU FTA에서는 리콜 시 통보의무를 상호 적용하는데 한미 FTA에서는 우리만 통보의무를 규정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鄭玉任 議員 그 이유 뭔지 다시 한번 답변하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미국 내에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국의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鄭玉任 議員 예, 미국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한 것이지 우리가 우리한테 불리하게 협정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진작 좀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참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아까 제가 사실 준비가 좀 덜 되었습니다. 미리 사전에……

○鄭玉任 議員 배출가스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 협정에서는 배출가스 관련 규정 내용을 보면 자동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돼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鄭玉任 議員 예를 든다면 이산화질소, 메탄입니다. 그런데 추가협상에서는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의 CO₂ 규제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이왕 질문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협상 결과를 보면 자동차 분야에서의 관세 철폐와 함께 돼지고기의 관세 철폐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로 볼 때는 좀 시간을 벌었는데요. 이 합의 결과 자세히 좀 설명해 보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난번에 이익의 균형을 이루어서 저희가 한미 FTA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미국 내에서도 약간의 정치적인 사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미 동맹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이익의 균형을 다시 이룩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우리 지금 걱정하시는 자동차 업계 쪽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자동차 업계에서는 빨리 합의가 체결됨으로써 어떤 체결이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는 것보단 이것이 낫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鄭玉任 議員 제가 돼지고기에 대해서 여쭙 봤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아, 네.

○鄭玉任 議員 그렇기 때문에 그 양돈과 관련해 가지고 돼지고기 관세 철폐 시한이 원래는 2014년까지 아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14년입니다.

○鄭玉任 議員 그것도 연장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鄭玉任 議員 몇 년 연장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2년 늘었습니다.

○鄭玉任 議員 예, 그래서 지금 한미 FTA, 한·EU FTA 해서 우리가 영토 규모로는 세계 108등이지만 경제 영토로는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한중 FTA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 이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시한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나름대로 목표 연도는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아직 목표 연도까지는 정하질 못했습니다.

○鄭玉任 議員 중국과 FTA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사건건이 발목을 잡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해서 유엔에서마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뭐 그래도 아직도,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입장에서 중국에 지렛대를 행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 핵 문제에 관한 한은 중국하고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 뭐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FTA가 된다면 그것도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鄭玉任 議員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 가지고 재처리를 하는 것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하는 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우리가 이제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 불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스스로 그렇게 선언을 했을 뿐입니다.

○鄭玉任 議員 합법입니다. NPT상의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하고 서로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북한이 그것을 걸레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런 북한을 성토하기는커녕 지금 북한을 두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는 미국입니다.

아까 국방부장관에게 제안한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전술 핵무기라도 들여놓으라고 큰소리치십시오, 미국에 대해서. 동맹이 됩니까? 동맹이라면 말로만 공약하지 말고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외교통상부 국방부, 미국과의 관계 좋기는 합시다마는 할 말 제대로 하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鄭玉任 議員 동의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물론 미국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정부가 제시한 비핵화선언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 저희 외교부의 입장입니다.

○鄭玉任 議員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핵화는 확실하게 지키되 미국의 전술 핵무기, 그것도 전 세계에 500개나 있는 것 중에 북한이 갖고 있는 것만큼만 갖다 놔다가 북한이 폐기하는 절차에 맞춰서 조금씩 철수하는 그러한 지렛대 전술을 쓰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鄭玉任 議員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 마지막으로 나오시겠습니까?

통일부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까도 그런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시다마는 하여간 우리 통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좋은 정책·전략을 수립하고, 또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서 미래의 평화통일로 가는 그런 기반을 우리가 쌓는 그것이 저희 통일부의 주요 업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지금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통일부의 존재 이유는 첫째 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북한의 유고 상황에서 북한 상황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북한 엘리트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우리가 여러 가지 단기·중기·장기 그런 정책의 목표를 세우고, 또 그것을 착실히 쌓아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鄭玉任 議員** 통일부장관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그러나 통일부의 존재 이유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해서 지난 정권처럼 대화의 값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대화가 성공했다고 일부러 가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요구를 먼저 공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푸십시오. 그래야만 대화를 하지 않아서 한나라당 정권이 강경책을 쓴다라는 모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북한의 도발에 벌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화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는 통일부가 통일정책을 위해서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과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여러 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화에 관해서도 저희 정부가 대화의 문을 일단 열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념해서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玉任 議員**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악마와 대화하는 것과 악마에게 기만당해서 악마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리고 악마에게 영혼을 뺏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촉구한 것은 악마와도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 기만당하지 말고, 값을 치르지 말고, 뇌물 주지 말고, 그리고 영혼을 뺏기지 않으면 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鄭玉任 議員** 들어가십시오.

이집트의 무바라크는 평양을 네 번이나 방문했습니다. 1973년 이집트와 북한은 혈맹이었습니다. 당시에 공군 사령관이었던 무바라크는 바로 북한의 독재를 벤치마킹해서 장장 30년이나 독재 집권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카이로의 아브딘 궁전 박물관에 있는 대형 그림입니다. 바로 무바라크의 60회 생일 때 김일성이 축하선물로 보낸 것입니다.

바로 그 이집트가 역사의 장엄한 기습을 당했고, 북한 내에서도 기아와 폭압에 시달린 인민의 불만이 폭발해서 시위를 벌이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은 군을 동원해서 시위를 진압하고, 폭동진압 특수기동대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창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지만 미래를 단정하기에는 한반도의 상황이 불가예측적이고 불확실합니다.

무바라크의 축출을 민주화라 열광하면서도 김정일의 세습 독재, 그리고 인권 학살에 침묵하면서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북한인권법 통과를 반대하면서 무신경한 한국 정치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초석을 놓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역사의 장엄한 기습이 우리에게 늘 관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보를 둘러싼 이념 양극화도 우리에게서 고통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국방은 철통같이, 그러나 대화는 대화대로, 인권은 인권대로, 외교는 외교대로 원칙과 유연성, 합리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안보정책,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의 핵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정옥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갑 출신의 김충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강동갑 출신 김충환 의원입니다.

지난해는 역사적 G20 정상회의의 성공, 세계 7대 수출국 도약, 417억 불의 무역수지 흑자 달성 등 성과가 많은 한해였습니다.

올해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EU, 한미 FTA 비준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한·EU FTA가 EU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쯤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좋나

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저희 정부의 소망은 7월 1일 발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늦어도 그 안에, 소망컨대는 4월 중에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김충환 의원** 7월 1일 이전에 처리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습니다.

○**김충환 의원** FTA와 구제역 발생 등 위기에 처한 우리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2조 2000억 이외에 추가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정부는 FTA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 분야에 대해서 국내 보완책을 이미 마련했습니다마는 이번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별도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충환 의원** 예.

미국이 3월 중 비준 요청을 할 것이라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미국은 쇠고기 문제 등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미국하고의 관계에서요?

○**김충환 의원** 예, 한미 FTA에서요.

○**국무총리 김황식** 우리 정부로서는 쇠고기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FTA하고 전혀 연관을 시키지 않고 있고, 또 쇠고기와 관련해서 별다른 협상 계획도 지금 없습니다.

○**김충환 의원** 미국의 한미 FTA 처리에 대한 현재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오바마 정부에서 되도록이면 빨리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에 맞춰서 빨리 비준동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충환 의원** 야당 일부에서는 한·EU FTA, 한미 FTA를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한·EU FTA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7월 1일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발효가 되기 때문에 꼭 그 안에 처리가 돼야 되는 관계가 있고요, 한미 FTA는 또 미국에서 처리되는 것을 봐 가면서 할 수 있는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이것도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면 한·EU FTA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충환 의원** 한·EU 또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국민들에게 짤막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습니다. 일부에서 부작용을 우려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FTA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실질 GDP와 후생수준에 상당 부분 증가가 있을 것이다, 특히 성장 부분에서는 향후 10년간 실질 GDP가 한미 FTA는 약 6.0%, 한·EU FTA는 약 5.6%의 GDP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요.

후생 수준에 있어서는 가격 하락, 소비자 선택 폭 확대 등을 통해서 한미 FTA는 2.9%, 한·EU FTA는 3.8% 수준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무역수지 흑자 폭도 상당 부분 확대될 것인데 대미 무역수지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4억 6000만 불, EU 무역수지는 향후 15년간 평균 3억 6100만 불의 흑자가 확대될 것이다, 요컨대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 밖에 일자리 확대라든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라든지 많은 부수적인 효과가 생길 뿐만 아니라 또 한국과 미국, 한국과 EU 간에,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적으로 공통화하는 나라 사이에 서로간의 관계도 더욱 증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충환 의원** 나라 경제와 소비자들의 소비 수준 향상을 위해서 어쨌든 이것이 빨리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로군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충환 의원** 그런데 최근에 오자가 몇 가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것은 수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이런 협정안의 사소한 문제라든지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상반기 내에 꼭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충환 의원** 예, 저도 그 점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의원들도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찬반을 표시하는 것은 좋겠지만 역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해 주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가 저는 굉장히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평가를 보면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한 것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유연성이 좀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았다, 이것만 가지고 과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대북정책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다른 정책을 선택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의 진통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로서도 그 점은 당연하리라고 보고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 나갈 때에 그야말로 궁극적인, 결정적인 효과가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부는 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유연성의 문제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는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김충환 의원 남북대화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금년밖에 없다 하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일정한 성과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일정한 원칙을 갖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일어난 사이에 그동안에 큰 결과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1·19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6자 회담과 남북대화가 같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합의가 됐고 또 대통령께서도 금년에 진정한 남북대화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또 한국은 그런 자세가 돼 있다 이렇게 며칠 전에 말씀하셨고 연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에 여러 차례 대화 요구를 해 왔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북한의 진정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실무회담에서 자꾸 그런 것을 요구하면서 회담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충환 의원 그런데 과연 실무자가 이러한 문제, 무슨 천안함 문제라든지 연평도 문제에 대해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무자가?

○국무총리 김황식 아, 그쪽 실무자가 말이지요?

○김충환 의원 예.

○국무총리 김황식 그래서……

○김충환 의원 과거의 선례를 볼 때 그렇게 요구해 가지고 과연 대화가 되겠느냐, 정말로 할 의지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저희로서도 유연성을 가지고 어쨌든 궁극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뛰어나간 겁니다. 뛰어나간 것이고, 또 저희로서도 그런 취지에서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고 원칙을 중시하되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유연성도 저희 정부로서도 갖추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환 의원 1·21 사태 때 청와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충환 의원 또 아웅산 사태 때 17명의 각료와 차관급들이 사망을 했고 또 KAL기 사건에서 115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북대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했었던 과거가 있고 또 이런 것에 대한 사과를 당시의 7·4 공동성명 때 최고위층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정말로 우리가 사과를 받고자 한다면 이런 실무자들한테 사과를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화를 하면서 이러한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 마는 그러한 사과나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서도 대화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UAE 원전 플랜트 본계약은 저는 아주 잘됐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일부 여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100억 불 금융 지원 조건에 대해서 의문을 자꾸 제기하는데 이 지원 조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게 본계약에는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만 들어가 있고요,

에당초에 입찰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자국의 수출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이번에 프랑스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다 같이 그런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계약보다도 먼저 앞선 단계에서 그 의향이 없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충환 의원** 특별히 우리만 더 과도하게 제기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국무총리 김황식** 아닙니다.

○**김충환 의원** UAE에 자금 조달과 수쿠크(Sukuk) 자금이 관련 있다고 하는 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그리고 UAE 원전 이후 지금 더 이상 수주를 못 하고 있고 터키 원전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 된 계약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 놓쳤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UAE 원전 이후에 수주를 못 하고 있는 것은……

○**김충환 의원** 베트남이나 터키, 다 놓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원전 수주 이후에 경쟁국의 견제가 심화되고 원전 수주 경쟁이 국가 대항전 비슷하게 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월등히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영향이라고 봅니다.

특히 터키 원전의 경우에도, 우리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어떤든 이익이 남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터키하고 관계에서도 전력요금이라든지 터키 정부의 보증이라든지 이러한,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터키 측에서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겠다 하는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저희가 물러난 겁니다.

그리고 터키로서는 일본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하고 터키하고 원전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한테로 돌아올 가능성도 조금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하튼 원전 수주, 특히 대형 플랜트 수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당연히 가장 좋은 조건을 내세우고 그것을 억셉트(accept) 하는 데가 아무래

도 제일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UAE 원전의 경우에도 우리가 수출금융을 한 절반가량 지원하기로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이런 대형 플랜트 수출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김충환 의원** 국민들이 자꾸 궁금해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쭙 봤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EU 국가들이 케냐 등 주변국들과 사법처리 MOU를 맺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는 왕실의 비행기를 빌려서 데리고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MOU를 맺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한 MOU를 체결해서 문제되는 해적들을 가령 체포하는 경우에 인근 국에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 인근 국에서 그러한 부담을 떠안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실상으로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저희 정부로서도 그러한 방안까지도 아울러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충환 의원** 하여튼 소말리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집트 대사관과 관련해서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29명의 직원들이, 외교관이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54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8명이 있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이 너무나 취약하다, 그 말씀은 들으셨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충환 의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집트 대사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의원**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 수출 7대 대국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외교인력이나 외교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이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부처 내에서도 이것을 이해를 좀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 결과 우리 외교관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특히 아프리카나 남미, 그야말로 적

극 외교가 필요한 이러한 곳에 외교공관도 부족하고 또 인력도 부족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외교관을 증원을 시키고 또 재배치를 하고 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외교 또 특히 경제외교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보강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면으로 하여튼 총리로서 관심을 갖고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GDP의 80%를 지금 대외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 외교 인력과 외교 예산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충환 의원** 감사합니다.

외교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8올림픽이 나라 발전에 큰 계기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의원** 그렇다면 이제 선진국 진입하는데 있어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랑 같이, 하여튼 우리나라가 유치할 수 있도록 같이 적극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IOC 위원들을 만나는 활동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하여튼 뭐 직접은 아니더라도 여건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또 유치운동 하시는 분들을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중국이 우라늄 농축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6자회담에서 하자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의원** 그리고 또 3월에 안보리 순회 의장직을 중국이 맡게 되면 사실상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는 어렵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뭐 어려울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어제 제재위원회에서 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결국 채택하다가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면서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3월에 의장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기대도 해 봅니다마는, 어쨌든 미국과 또 일본 그리고 러시아 등과 협의하면서 중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한중, 한·북한 관계를 놓고 볼 때 지금 중국 외교를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의원**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대북정책에 있어서 우리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를 해야만 대화를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뭐 사과……

○**김충환 의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입장은 ICBM과 핵 확산 차단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한국이 계속 이것을 지연시키고 소극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거 방향,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미 간의 입장 차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미국 국내에서 일부 학자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한미 간에 이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 간에는 입장 차이가 없습니다.

○**김충환 의원** 아직까지는 표출이 안 됐을 뿐이지, 계속 지연돼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김충환 의원**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우리가 남북관계가 이런 조건으로 해서 해결이 안 되면 6자회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지금 말씀하신……

○**김충환 의원** 이런 상황이 계속돼도 괜찮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돼도 된다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현재까지는 한미 간에 입장 차이가 없고, 또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하여튼 외교장관께서 전체, 총리님과도 의논하시고 또 통일부하고도 의논해서 좀 신축성 있게 이 문제를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리비아에서 간첩사건이 지난번에 있었지요, 지난 연말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김충환 의원** 또 인도네시아의 특사단 숙소 문제가 있었고, 또 며칠 전에는 한미 간에 통일부 장관의 말씀과 관련해서 또 무슨 이렇게 언론에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외교부에서 외교를 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런 일들이 저희 외교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겠습니다. 조금조금씩 사안이 3개가 좀 다른 사안이고요, 또 마지막의 통일부장관 관련된 부분은 언론에서 조금 잘못 보도된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충환 의원** 종합적으로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대외관계이기 때문에…… 외교장관께서 각 정부부처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세워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북한과 일본 관계가 정상화가 되면 한국의 입장이 대북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조금 약화될 문제가,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금 조·일 관계 정상화가 과거 청산이 선결되면 풀 수 있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일본은 6자회담과 별개로 북한과의 독자적인 접촉을 갖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정말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일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

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 의원님 지적 저희들이 유념하겠고요. 또 이런저런 상황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일 간에 공조가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분야가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현재 6자회담의 틀로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는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지금 6자회담이 최근한 2년 동안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안보문제와 통일문제를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사실은 통일문제에 대한 진척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한번 정부 내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평화 통일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는데……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

○**김충환 의원** 그 뜻이 뭔지 국민에게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이 얘기는 우리 정부가 우리 한국이 중심이 되어서 한반도가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도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주변 국가들의 이해에 전혀 반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저희들이 적극 공감대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통일이 되어도 중국의 이해와 전혀 반하지 않는다 하는 점을 저희들이 기회가 나는 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통일부의 업무를 대외적으로 관계국들과 설명하고 의논하는 것은 외교부가 되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의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김충환 의원** 이집트 대사관의 인력 부족 문제

는 어떻게 해결책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래서 지금 아까 총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한 80여 명 정도가 외교부 전체 인원이 증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상당 부분을 아랍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많이 특채를 해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이집트 등 아랍어권 지역에 배치할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리비아 등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지금 교민 보호대책, 철수대책은 완벽하게 되고 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완벽하다고 그렇게 스스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 교민의 안전을 최대한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고 지금 전세기가 트리폴리에 카이로에서 도착을 해서 곧 우리 일부 교민들을 신고 나올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KAL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워낙 여러 나라의 비행기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은 지체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최선의……

○**김충환 의원** 하여튼 결과적으로 교민들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일정책의 성과가 너무 없다 하는 이런 평가가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장관님 취임하신 지 거의 2년이 되셨고……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의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본인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남북대화에 진척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간이 금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해인데 무슨 대책이 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인위적으로 꼭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제가 볼 때는 통일 열기가 지금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일 열기를 재점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대화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보문제와 통일문제를 이렇게, 안보문제가 해결되어야 통일문제를 다루겠다 이렇게 하면 통일부가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 문제도 병행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세 등 구체적 준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정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뭔가 그래도 이 통일분야에 남기고자 한다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통일세 문제에 대해서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것을 보면 1570억 불을 투자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산출 2200불로 해서 약 600억 불 이익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일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4월까지 연구 결과를 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저희가 그 문제에 관해서 전문가 그룹들에게 지금 연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애당초는 저희들이 4월 말경이면 1차 결과보고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조금 늦어져 가지고 5월 말 정도면 1차 결과보고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여간 상반기 내로 구체적으로 그 안을 좀 마련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법안 만들면…… 꼭 그 연구 결과 종합물이 나와야만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김충환 의원** 같이 해서 좀 빨리 생각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남북관계 진척이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저는 이 하나는 굉장히 중요하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김충환 의원** 이거 되면 그래도 뭔가 앞으로 통일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성과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김충환 의원** 지금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식량 분배 모니터링을 받겠다 이렇게 했지요, 보도된 것 보면?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만약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면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의

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분배 투명성에 관한 문제 그것이 좀 제대로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 물론 대규모 식량 지원 이것은 인도적 지원과는 조금 다른 그런 고도의 남북 간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대규모든 소규모든 따지지 말고 인도적 지원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하여간 뭐……

○**김충환 의원** 그래야지…… 이렇게까지 말로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까 사진 보지 않았습니까? 제발 좀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김충환 의원** 다음으로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물론 정부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대책은 없고 그냥 보고 있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남북이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큰 틀에서 협력을 하게 되면 지금의 북·중 경제협력보다는 훨씬 더 심도 있는 그런 경제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야 전체적으로 북한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탈북자가 지금 2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대개 식당이나 또는 노동자로 다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통일시대를 맞이한다 그러면 북한에 있는 전문직이 전부 한국에 와서 노동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 그런 것에 대한 연구 좀 해 주시고.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김충환 의원** 특히 북한에서 교사를 하다가 온 사람들 재교육을 통해서 보조교사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과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하여간 특히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중에 전문직에 계시던 분들이 우리 사회에 와서도 전문직을 계속 살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가 보다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요. 실제로 이미 특정 분야에 관해서는 그것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직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관련 부처하고 좀더 깊은 숙의를 해서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하여튼 선진화 이후에 통일은 시대적 과제라고 하니까 장관님께서 특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들어가시지요.

국방부장관께 여쭙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도를 보면 1월 13일 날 브루스 클링너, 2월 10일 날 제임스 클레퍼, 2월 17일 날 로버트 월러드, 2월 17일 날 송영대 전 통일부차관, 2월 18일 날 김황식 총리님, 2월 23일 날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이런 분들이 전부 멘트를 낸 것이 뭐냐 하면 ‘수개월 또는 금년 내에 굉장히 도발이 심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 보셨겠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충환 의원** 장관님,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예고를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김관진** 여러 가지 도발 가능성과 징후를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요 문제는 유형 전력 측면에서 감시장비를 잘 가동하고 있느냐, 감시를 잘 보고 있느냐, 타격 전력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느냐, 무형전력 측면에서 이것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훈련은 어떻게 돼 있느냐, 정신 자세는 어떠냐, 종합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전선만 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간접침투 내지는 후방교란 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김충환 의원** 철저히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키 리졸브 훈련 내용이 바뀌었다, 급변사태 및 국지도발 대비 위주로 변경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키 리졸브 훈련은 일반적으로 우리 방위에 관련된, 국토 방어에 관련된 훈련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북한에 관련된 입장을 밝힌 바 없고, 이것은 계획대로 훈련이 진행됩니다.

○김충환 의원 미 20지원사령부 산하 요원들이 새로 참가한다,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북한의 핵문제 등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훈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게 되면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충환 의원 그게 새로운 참여인가……

○국방부장관 김관진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김충환 의원 아닙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충환 의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 20지원사령부 산하 요원들이 참여하게 되면 이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 후에 북한의 도발이 우려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대비를 하게 되면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훈련을 해서 도발이 우려가 된다는 것은 이론에 맞지가 않습니다.

○김충환 의원 변동이 생겼습니까, 키 리졸브 훈련 내용이? 그전에 하던 것하고?

○국방부장관 김관진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김충환 의원 풍계리에 핵실험 쟁도가 건설 중이고 철산군 동창리에는 30m 높이의 ICBM 미사일 발사대가 설치됐다, 신문에 사진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동창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충환 의원 동창리 30m ICBM, 풍계리 핵실험 쟁도, 그 문제 같이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것은 북한의 ICBM 능력 또는 핵실험에 대한 징후 등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한미 간에는 여러 가지 징후를 포착

해 가지고 확장억제정책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면밀히 대책을 수립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하여튼 장관께서 전선과 후방에 관계없이 국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잘 알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올해 초부터 중동·아프리카에서 재스민 혁명이 일어나는 등 세계 정치와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다져야 하겠습니다.

우선 당면한 한·EU, 한미 FTA를 마무리 짓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 통일세 등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또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통한 국토방위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리와 외교·통일·국방장관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김충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존경하는 조운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형 부의장, 박희태 의장과 사회교대)

○조운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조운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형 원조 그리고 한국형 원조의 선진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짚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짙막한 외국의 우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본 우화입니다. 원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하는지 시사해 주는 바가 있는 우화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뚜껑이 열려 있는 맨홀 구멍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지나자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이 사람은 명함을 한 장 건네주었습니다. ‘나중에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제가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초지종을 들은 뒤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성심껏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사정 얘기를 들은 세 번째 사람은 갑자기 맨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곁에 함께 있어 드리겠습니다'

이 우화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아마 어려움을 공감하고 도와주려는 그런 뜻을 가늠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야 옳았습니다.

'저도 여기 같은 곳에 빠져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나가시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수원국에 대해서 원조를 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진국이 200~300년 걸렸던 것을 우리는 60년 만에 해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믿기 어렵겠지만 60년 전의 청계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60년이 지난 오늘 청계천은 이런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지금 저개발 국가들은 대한민국,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배우고 싶어 합니다. 대한민국을 배우면 달라지리라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 왔던 공적원조가 과연 60년간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하나 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작년 연말 취임 100일을 맞아 2011년 5대 국정운영 과제 중 하나로 공적원조, ODA를 꼽으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조윤선 의원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향후 2015년까지 GNI 대비 공적원조 비용을 0.25%까지 끌어올릴 예정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조윤선 의원 올해 예산이 모두 1조 7000억 원

입니다. 2015년이 되면 3조 5000억 원으로 증가를 하는데요. 올해 문광부 예산이 3조 7000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처의 예산과 맞먹는 돈이 공적원조에 들어가는데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공적원조 제대로 시행되어야 하겠습니까.

2008년에 우리가 원조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 국가들이 특별점검을 한 적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조윤선 의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집약하면 세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원조의 분절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의 부족 그리고 수원국과의 괴리, 체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원조의 분절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분절화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상원조와 무상원조가 서로 연계되지 않는 점 그리고 무상원조 중에서도 주관기관인 외통부와 기타 다른 부처와 지자체가 산발적으로 공적원조를 하는 점입니다.

우선 총리께서는 차관 형식의 유상원조와 프로젝트 형식의 무상원조가 서로 연계를 한다면 훨씬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동의합니다.

○조윤선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가 이렇게 제대로 협조가 잘 되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많이 미흡했습니다.

○조윤선 의원 지금 화면에서는 말 그대로 나홀로 원조, 이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사이에는 그야말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도 각자 세우고 집행도 각자 하고 평가나 감사도 각자 합니다.

사실 유·무상 원조가 사업 자체를 함께하는 협력사업이 됐을 때 가장 효과가 크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조윤선 의원 예를 들면 유상으로 학교를 지은 후에 무상으로 교육 전문가와 봉사원을 보낸다는지 아니면 무상 협력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유상 협력으로 본사업을 시행한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생각하시기에 사업 자체를 협력해서 진행하는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

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까지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부족했습니다. 무상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그리고 유상원조에 대해서는 기재부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되지 않았던 이런 탓입니다. 앞으로도 유상·무상은 지금 말씀드린 부처 중심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그것을 종합하고 연계하는 노력이 있어야 조 의 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데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없었다 하는 것이 문제인 거 같고, 따라서 그것을 총리실에서 개발협력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전부 점검하고 또 실제로 집행해 나가는 것을 감시 감독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조윤선 의원** 지금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간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무상원조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습니다.

무상원조를 주관하는 기관이 외통부 또 외통부 산하의 KOICA죠?

○**국무총리 김황식** 예.

○**조윤선 의원**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대외 무상원조를 행하는 주체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각 부에 많은 부처별로 행해진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민간 차원에서 많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윤선 의원**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32개의 정부부처 그리고 71개의 집행기관이 무려 100여 국에서 1073개의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나대로 원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나대로 원조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도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제대로 원조가 되고 있는 원활한 구조입니다. 현지공관을 통해서 수원국과 우리나라의 원조기관과 수원청이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개별 부처나 지자체에서 수원국의 중앙 수원청이나 현지공관을 거치지 않고 개별 부처, 개별 기관을 접촉해서 원조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도면에 있는 빨간 점선 표시가 그 모습인데요.

원조 주관 부서에는 각 수원국마다 원조 계획

을 세워놓고 있죠?

○**국무총리 김황식** 예.

○**조윤선 의원** 이렇게 이 원조 계획을 무시하고 또 현지공관이나 원조기관, 집중 원조 중앙청을 통하지 않고 원조를 하는 경우에는 이 계획이 어긋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조윤선 의원**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우선 개발순위가 낮은 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고요. 또 수원국의 고위급 관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에 원조의 투명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죠.

70개 기관이 제각각 집행하다 보니 당연히 사업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국에서도 이들 사업이 공적원조인지를 모르고 OECD에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세금이 허무하게 쓰이는 바로 이 문제가 됩니다. 마치 원조가 지자체나 각 부처의 선심이나 홍보성 사업으로 치부돼서는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작년 한 해 몽골에서는 모두 18개 부처, 캄보디아에서는 13개 부처, 중국에서는 18개 부처가 각각 공적원조를 해 왔습니다.

또 사업별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에서 집중적으로 KOICA와 함께 하고 있는데 새마을중앙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한 수원국에서는 이미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는 경북도가 아닌 지자체에서 새마을운동을 하겠다고 타진을 했답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평가하고 난 다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사업을 확장하자고 하니 현지공관 모르게 시찰을 다녀갔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 보신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의 노란선을 주목해 주신다면, 만일 개별 부처가 수원국의 개별 부처로부터 원조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 이 사실을 현지공관이나 우리의 주무 부서에 통보를 한다면, 조율하기만 한다면 이런 부작용은 없어지겠죠?

○**국무총리 김황식** 예.

○**조윤선 의원** 작년 말에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지 ODA협의체를 꾸렸는데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직 부족합니다.

○**조윤선 의원** 총리께서는 이런 분절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지적하신 대로 ODA사업의 분절화는 여러 부처가 상호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저희로서는 사업 선정 단계와 또 사업 시행 단계를 나누어 가지고 사업 선정 단계에서는 매년 각 부처의 ODA사업 전체 한 1000여 개 되는 것을 전수조사해서 중복성이 없는지를 따지고 연계 가능성을 또 검토를 하고, 또한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수원국, 원조를 받는 나라의 현장에서 공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현지 협의체를 설치해 가지고 현지에서 추진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공관장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요컨대 사업 선정 단계 그리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 컨트롤 타워를 뒤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하튼 현장 중심의 ODA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윤선 의원** 예. 지금 총리 말씀을 들어 보면 향후 바람직한 원조 체계는 지금 도면과 같은 체계가 되겠는데요. 지금 부처 간의 협조가 가장 안 되는 이유는 권한과 책임이 명백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간 컨설팅 폼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해 주는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사결정권자를 지정해 주고 여기에 정보를 제공할 역할을 할 주체,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주체, 그리고 법률적이거나 예산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 그리고 집행할 주체를 각각 사전에 명확하게 분담을 한다면 이런 부처 간의 협조가 좀더 원활해질 수 있다는 제안을 민간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조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월에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2조에 의하면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가 무상외교를 주관할 책임이 있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윤선 의원** 장관께서는 아까 총리께 무상원조와 분절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보여 드린, 독자적으로 접촉해서 무상원조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는 화면을 잘 보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봤습니다.

○**조윤선 의원** 작년 하반기에 꾸려진 우리의 ODA 현지 공관 중심의 협력체가 아직 잘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교통상부가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전 부처로부터 또 지자체로부터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조정하셔야 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윤선 의원** 그리고 가장 전문성 있게 효과적으로 수행했던 사업기술도 출연해야 할 책무가 외교통상부에 있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조윤선 의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마을운동이나 IT사업 그리고 석·박사 학위 과정에서 여러 사업이 중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조윤선 의원** 또 '월드 프렌즈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이미 통합이 됐는데도 최근에 한 행정부처에서는 봉사단원을 또 몰래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내년에 사업을 총괄해서 조정을 하려면 예산 문제가 뒤따르는데……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윤선 의원** 이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드라인이 언제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금년은 통상적으로 10월까지는 다 편성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윤선 의원** 예,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10월 법정시한이고 올 5·6월경에는 이제 부처에서 편성하셔야 되는데……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윤선 의원** 지금 내년 예산에서…… 올해 예산에서는 통합하는 것이, 190억을 통합하는 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중복사업 없도록 조율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상원조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제정이 돼서 외교부 내에 무상원조 기관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말

씀하신 그 33개 무상원조 시행기관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781건을 받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중복 여부를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이것 검토가 끝나고 나면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3월 중에 다시 한번 해서 금년에는 하여튼 최소한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선 의원** 예.

아까도 김충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현지 공관에서는 ODA 협력체가 설립돼서 부처와 협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 이 현지 공관이 우리가 유·무상 원조를 연계하고 또 무상원조를 일원화할 때 역할 부담이 굉장히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윤선 의원** 그런데 이 주무 집행기관인 현행 KOICA 인력이 이를 감당하는 데 충분한지 사실 좀 의문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KOICA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차 조직진단을 했고요. 그 결과 향후 매년 한 25명에서 30명 정도씩을 늘려야 된다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아마 25명 정도를 우선 늘려서 그중에 약 15명을 해외에, 현지에 파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윤선 의원** 예.

지금 화면에 보시면 KOICA가 91년에 설립돼서 20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예산이 30배 늘었는데 인원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윤선 의원** 분절화 문제를 위해서 공관과 KOICA 역할이 커질 텐데요. 아까도 지적된 바가 있지만 우리 해외 공관, 특히 저개발국의 공관 인력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열악합니다.

○**조윤선 의원** 아프리카의 총 수교국이 46곳인데 13개국에만 대사가, 공관이 있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조윤선 의원** 그런데 선진국의 공관에 비교해서 가뜩이나 가기를 꺼려하는 저개발국에는 이 기초업무 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윤선 의원** 그래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는 외교관들이 단순한 문서작성 업무라든지

복사 업무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KOICA에서는 해외 봉사단원도 많이 늘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윤선 의원** 그리고 지역 전문가를 희망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은퇴 전문가 중에 이런 저개발국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공관의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또 기초인력, 전문인력을 확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래서 우선은 급한 대로 금년에 ODA를 전담할 수 있는 ODA 인턴제도를 도입을 해서 한 200여 명을 일단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분들을 공관에 내보내서 ODA 업무를 좀 돕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윤선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 다시 한번 마무리 질의 하겠습니다.

대외원조 협력의 선진화 방안이 신속하게 집행되는 건 참 반가운 일인데요, 중점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 당장 그다음 해부터 원조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일은 사실은 상대국 수원국의 신뢰를 상당히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2·3년 동안에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수원국과 원조를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대와 신뢰도 쌓여 있었는데, 2·3년의 경과기간이 없이 당장 시작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도와주고도 욕을 먹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챙기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원조를 하면서도 수원국에 상처를 주거나 또 불쾌감을 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저희는 선진화 방안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수원국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중장기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점협력 대상국이 아님으로 생기는 그런 문제도 함께 고려를 하겠습니다.

○**조윤선 의원** 예, 작년 말에 결정된 그 중점협력국에서 빠져 있게 돼서 혹시 수원국의 신뢰를

크게 상실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조윤선 의원** 작년이 한국전 발발 60주년이었습니다. 보훈처 중심으로 여러 가지 보훈행사를 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는 제가 실제로 방문했었던 에티오피아의 한국전 참전용사 가정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극빈층으로 전략해 있는 가정인데요, 보훈처 중심으로 2013년까지는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하는데 그 이후는 없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실무진에서 그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그 규모를 늘려 가고 있고 또 특히 참전국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는 그런 행사를 벌이고 있고 그걸 작년의 행사로 그치지 않고 연장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속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선 의원** 현지 교민들의 말에 의하면 60주년이라고 그래서 지자체, 단체, 뭐 NGO 와 가지고 장밋빛 약속을 하고는 돌아가서 연락도 없어서 마음의 상처가 대단히 깊다고 합니다. 이 점……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런 점에서 좀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저개발 국가에 대해서 늘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동반자란 어떤 것인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오늘은 단지 우리의 어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내일이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되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손에 손 잡고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날은 바로 모레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박희태** 존경하는 조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습니다.

다음은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송영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김정일 정권이 핵을 포기하리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게 쉽게 포기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송영선 의원**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린다면 김정일에게 핵 포기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정부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선 의원** 목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송영선 의원**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면 핵이 포기될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많은 노력이 병과돼야 되지 뭐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이 포기된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영선 의원** 북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이야말로 북한체제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김정일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1991년 11월 8일, 한반도 비핵화 선언 됐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는 비핵화가 된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핵 위협이 가장 높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앞장에 선 미국과 한국은 북한 핵의 불모가 되었습니다.

비핵화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여섯 차례의 6자회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389회의 남북회담을 개최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이 11조 4885억 원에 달하는 대북 현금과 지원을 펴부었습니다.

그 결과가 핵 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이었습니다.

쌀과 돈을 퍼 주면 김정일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나 순진하고 허황된 기대입니다. 과거 DJ정권부터 이런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북한 핵의 불모가 된 것은 북한 정권이 우리를 속인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김정

일을 믿고 우리 스스로를 속인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올해 4, 5월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한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송영선 의원** 저는 30년간 북한을 공부해 온 사람으로서 가능성을 95%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이때까지처럼 또 두려움에 떨면서 미국과 중국에게 매달려 메아리 없는 도움만 청하시겠습니까?

싱가포르의 이광요 전 수상이 “북한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로 막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오직 그들의 경제 성장,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 6자회담 테이블에 앉습니다. 북한 핵을 왜 막습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야 미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중국이 우리를 위해 북한 정권의 비핵화에 앞서 주리라는 환상에서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 이라크전쟁이 터지자마자 6자회담을 제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6자회담을 통해 무엇을 얻었습니까?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동결되어 있던 김정일 자금 해제해 주고, 북한에게 50만t 중유 주고, 한국하고 중국에게 경제지원 하라고 6자회담에 불러내는 것 외에, 한 가지 더 얻은 게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북한이 플루토늄탄, 고농축 우라늄탄 모두 개발할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박희태 의장, 홍재형 부의장과 사회교대)

정작 우리에게 미국은 한번도 북핵을 언제까지 종료시키겠다 시간표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자회담에 모든 것을 걸고 대화를 통한 해결,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허한 주문만 계속 외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핵 폐기를 위해서 이제 우리도 핵주권을 가져야 한다.

총리, 본 의원은 핵주권 행사를 위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이 언제까지 북핵을 폐기할 것을 약

속을 받아낼지, 미국은 한번도 우리에게 북핵 폐기를 완료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약도 없는 핵 논쟁에 끌려 다니기만 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약속을, 이 타임테이블 약속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미국으로서도 쉽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

○**송영선 의원**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시다는 거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지금 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과거 정부가 해 온 협상의 모든 내역으로 봐서 점진적·부분적 이렇게 단계적인 방법으로는 그게 어려울 것 같다 하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소위 모든 핵 폐기 그리고 관련된 경제협력 모든 문제들을 한데 묶어서 일괄타결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정부 입장이고, 이것을 유효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구가 현재로서는 6자회담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선 의원** 살라미, 바스켓 튀 패키지, 온갖 용어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핵을 가진 것이,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미국이 타임테이블 설정하고 그 이행 약속을 거부하거나 불분명한 태도를 취한다면 앞서 몇 명의 의원들이 제안한 92년에 철수시킨 전술핵 재배치를 약속받아 주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저희 정부가 기본으로 갖고 있는 거나 또 세계에 표명한 것이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비핵화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선 의원** 저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냉전시대에 서독의 퍼싱 미사일에 미국의 핵탄두를 장착해서 구소련 진영의 동독을 견제했습니다. 미국의 전술핵 배치는 중국이 북핵 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하나의 압력 수단도 될 수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독자적인 핵 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반대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비난하고 일본이 경계하는 대한민국의 핵무장 선언이 동북아의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본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치 국가 간의 핵 협상은 오직 핵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역사가 60년 동안 보여 주어 왔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우리는 지금이라도 핵 주권에 대해 전 국민과 함께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까지 실효적인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고민하시는 송 의원님의 의견에 경청을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어야 되고 이러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후까지 노력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

○**송영선 의원** 모든 방법이 우리가 핵을 갖는 방법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송영선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우리는 피해를 본 게 없다. 국정원 소행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도 한국 정부가 국정원장을 문책하면 인도네시아를 바로로 만들고 국제 문제가 됩니다.

작금의 사태는 인도네시아보다 우리의 국격이 더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전 세계에 지금 보여 준 사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사실관계가 정확히 드러나지…… 제가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의원** 저는 사실관계를 지금 밝히려는 게 아닙니다.

1970년대 미국 측이 박정희 대통령과 청와대를 상대로 도청하다가 발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CIA 몰러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또 임동원 국정원장 시 김정일 비자금 수억 달러가 드러났을 때도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가 테러분자를 암살한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국가는 전쟁에서 진 경우가 아니면 국익을 위한 해외 첩보 활동에 대해 당사국에 사과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천안함 폭침 지령자를 암살했다면 국정원 요원을 살인죄로 규탄해야 합니까?

천안함·연평도 사태에서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국가안보와 군사기밀이 발가벗었습니다.

민주주의국가는 국민의 알권리를 독재국가보다 더 많이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경계선은 국가 이익 보호와의 형평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이스라엘은 핵폭탄 수백 개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지도 가지고 있지 않지도…… 있다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모호성 전략(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호성 덕분에 이스라엘은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핵 강국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폭로가 이루어지면 모호성과 유연성이 깨지고, 그러면 그 모호성과 유연성이 지키는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총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국내외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는 것이 국정원 기본 임무라는 것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동의합니다.

○**송영선 의원**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 국정원 요원의 자질·능력·전문성이 국정원 존재 명분에 위협을 가할 정도로 저하되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저는.

향후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정원의 임무와 요원들의 자질·능력·전문성 강화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말씀에 참고는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에 대한 답은 곧 국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했다 하는 것을……

○**송영선 의원** 아니, 개입의 문제가 아니고 저의 요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하는 그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송영선 의원** 그걸 해 달라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송영선 의원** 더 강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것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일 겁니다.

○**송영선 의원** 제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까?

그리고 DJ 정권 이후에 대북 정보 수집·분석 능력은 약화되었고 전문 인력이 대폭 감소됐습니다.

북한 위협이나 북한체제 변화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이 시점에서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크게 강화시킬 조치도 이 기회에 약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시다마는 기본적으로 국정원 업무는 총리 업무하고는 별개의 독립된 업무입니다.

그러나 총리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송영선 의원** 관심보다는 좀 적극적인, 할 수 있는 범위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송영선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최근 연평도 사태 이후에 국방부가 해병대 예산하고 병력을 크게 증강시키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지시 때문입니까, 국민 여론 때문입니까, 아니면 장관께서 직접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하신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서북 5도서를 볼 것 같으면 지리적 여건상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 취약점을 보강해야 됩니다.

○**송영선 의원** 제가 과거 7년 동안 요구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 됐는데, 어쨌든 장관께서 그것을 인식한다면……

해병대 병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도 병행하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송영선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포항에 주둔하고 있는 1사단을 상륙작전 전라기동부대로 특화시키고, 2사단은 김포반도 경계임무에

서 벗어나 평시 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신속대응부대로 발전시키고, 6여단과 연평부대는 서북전략도서 방어를 위해 획기적인 전력 증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기본 의견에 동의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선 의원** 그렇다면 이런 임무 수행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의 육·해·공 3군 체제를 4군 체제로 개편해서 해병대에게 독립된 예산·인사·작전권 부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근본적으로 지금은 3군이 어떻게 하면 합동성을 이루어낼 것이냐 하는 것이 기본 구상입니다. 합동성이 강화된 군대일수록 선진화된 군대이고 전력 발휘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이미 입증됐거든요.

만일 4군 체제를 유지한다면 불필요한 행정조직이 더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체제더라도 해병에게 보다 나은 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송영선 의원** 그래서 4군 체제가 3군 체제보다 덜 효율적이지 않아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송영선 의원** 앞서 질문에서 ‘전술 핵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하셨다가 또 ‘모든 가능성을 고민한다’ 하셨는데 올해 4, 5월 중에 북한 핵 실험…… 저는 특히 올해는 플루토늄보다 고농축 우라늄 실험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 이와 같이 제3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전술 핵 재배치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시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와 국가방위의 가치는 어떤 가치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술 핵 배치를 거론하고 나면 여러 가지 국제관계가 대단히 미묘해지고 어려운 지경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선 의원** 이 자리에서 공론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김태영

장관도 '전술 핵 배치를 고려해야 된다', 이 자리에서 이상희 장관도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앞에서 '전술 핵 배치를 요구하는 것은 학술적인 논의에 불과하다'

저는 지금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지 학술적 토론을 하러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국가 비밀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을 못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앞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상황마다 이야기를 바꾸시는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 못 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유감입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상황마다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 비핵화 원칙은 고수한다, 미 측과……

○송영선 의원 비핵화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안 되는데? 20년간 했잖습니까? 안 되는데 어떡하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좀더, 좀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송영선 의원 그러면 과거 정권은 노력 안 했습니까?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도 노력 안 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성을 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장관님 말씀을 국민 앞에 내놓고 토론할 수 없는 거라서 당분간은 고심하겠다고 듣겠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송영선 의원 키 리졸브 훈련 후에 도발 사태의 가능성으로 최근 완공된 용연군 고암포 새로운 공기부양정 기지에서 공기부양정으로 저는 인천 지역을 기습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영선 의원 검토만 하십니까? 공기부양정 기습할 때 우리 대응 지금 방안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대응책을 현재 갖춰 가고 있습니다.

○송영선 의원 아파치헬기의 헬파이어로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지금. 해안포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실험을 해서 알아냈잖습니까? 그런데 아파치헬기는 주한미군과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내보내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몇 대…… 12대를 갖고 있지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파치헬기를 사용하지 않

더라도 충분히……

○송영선 의원 코브라는 밤에 작전 못 합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선 의원 BO-105도 안 됩니다. A-10도 무거워서 안 됩니다. 그리고 A-10은 됩니까? 고정익 A-10……

○국방부장관 김관진 여기서 전력 운용을 가지고 오랫동안 토의하기에는 너무나 자리가 좁고 너무나 공개적입니다.

○송영선 의원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느냐고 했잖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가지고 있고……

○송영선 의원 공기부양정 속도가 몇 km지요? 시속 90km입니다. 자동차만치 빠랴요. 높이대도 갈 수 있습니다. 은닉할 수 있습니다.

특수작전부대를 30, 40명 내려놓고 갑자기 갔다가 인천의 주요 시설, 국가 기관·기지를 치고 다시 도망간다? 어떡하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반면에 바다에서 해상을 갖다 날듯 달린다는 이런 또 하나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약점을 읽고 그에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선 의원 예, 대비책을 갖고 있다는 장관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송영선 의원 또 다른 도발 가능성, 청와대 등 서울 도심 상공 방어하는 35mm 대공포 지금 문제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몸통 부분의 그 수출…… 수입과 관련해 가지고 다소 문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송영선 의원 대안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

○송영선 의원 검토 아니고 준비해 놓은 대안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 나머지가, 수치를 머릿속에……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량은 다수는 사격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일부 문제가 되는 것은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영선 의원 이게 일어난 게 사실은 1998년에서 2003년 사이인데, 서울 상공을 방어하는데 이

때까지 국방부가 이걸 문제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지금 와서 곧 교체, 정말 유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송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반도 비핵화를 부르짖은 지 20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 비핵화가…… 한반도는 비핵화가 된 것이 아니라 북한 핵의 불모가 되었습니다. 어찌면 자업자득인지도 모릅니다. 김정일에게 조건 없는 도움과 믿음까지 준 결과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시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의 핵 주권을 스스로 확보해야 됩니다. 김정일의 핵 위협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자랑스럽고 강한 국가의 진면목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송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함평·영광·장성 출신의 존경하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의원** 먼저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함평·장성·영광 출신 민주당 이낙연입니다.

총리께서는 답변대에서 저의 발언을 듣고 계시다가 제가 부탁드릴 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총리님의 고향 어른들이 방청하러 오셨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세기적 격랑에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힘의 전환을 극적으로 실현하며 그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응축된 세 번의 상징적 사건이 최근 우리 앞에 잇달아 일어났습니다. 작년 3월의 천안함 사건, 11월의 연평도 사건, 그리고 금년 1월의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천안함 사건은 탈냉전의 동북아시아에 한미 대

북중의 신냉전적 대결 구도를 깊게 심어 놓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굳이 전쟁기념관에까지 가서 대북 군사 응징 의지를 천명하셨지만 연평도 피격을 막지도 못했고 제때에 응징하지도 못했습니다.

연평도 사건은 한반도를 준전시 상태에 빠뜨렸고 한국 정부의 대북 자세를 더욱 강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그런 기류와 별도로 국제사회는 한반도 전쟁 방지와 긴장 해소를 위해 적극적·다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에 공감하면서 남북한 쌍방에게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냉전 시대의 미·소(美蘇)를 대체하는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G2의 존재를 세계 앞에 웅변했습니다.

한반도는 미중에 의한 세계 질서 재편의 격동속에서 전쟁이나, 평화냐의 외줄 타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관리해야 할 우리는 대미 관계와 대중 관계의 일정한 균형을 요구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균형은 심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한중 관계가 너무 경시되고 있습니다.

연평도 피격 이후 곡절을 겪었지만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결국 서해에 진출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북한 두둔을 경고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손상된 한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중국이 북한을 비호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은 중국이 경계하는 미국의 동맹이라는 사실이 강렬하게 부각된 반사적 결과입니다.

이제 중국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미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 동맹에 편중하면서 중국에게 북중 동맹을 깨고 우리 편이 돼 달라고 요구한다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미 동맹에 치우칠수록 중국을 더욱 북한 편으로 떠밀게 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편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통적 한미 동맹은 유지하되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표현된 것처럼 ‘강력하고 번영하며 성공적인’ 중국도 배려하면서 국익을 키워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한미 동맹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

건은 아닙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미국보다 더 미국적이라고 일컬어졌던 자민당 정권이 무너지고 아시아 중심 외교를 표방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합니까? 한때 미국 중심 외교를 강력히 추진했던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마저 미국의 힘이 쇠퇴하고 있다고 최근 서울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만 남북관계까지 포기하면서 미국 중심의 대외 정책을 고집합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길입니까? 최근 정부가 북한 관련 문제가 나올 때마다 특하면 UN에 가져가지만 중국의 벽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하는 이 현실을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까지의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는 서로 경쟁하거나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미 동맹이 한중 관계에, 어떤 밀어내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 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한미 관계, 한중 관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보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로서도 앞으로 이낙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관점에서 한중 관계를 결코 소홀함이 없이 더 보충·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의원** 총리 답변을 들으면 그럴싸한데 정부가 움직이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장관들이 총리 말씀을 전혀 안 들으시는지, 여기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관들한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총리 말씀을 교과서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외교장관도 평소에 중국 관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또 정치 외교적으로도 결코 서로 멀리할 수 없는 이런 나라고, 그런 방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의원** 그렇다면 여쭙습니다. 작년 말에 위키리크스가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발

언을 폭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천 수석은 외교부 제2차관 시절에 당시의 대화 상대였던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를 가리켜서 '가장 무능하고 오만한 관리이며 북한과 비핵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홍위병 출신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발언, 이런 발상이 외교 책임자로서 적절한 것입니까? 이런 외교안보수석을 가진 정부를 중국이 존중하겠습니까? 이런 외교안보수석을 곁에 두는 대통령을 중국 지도자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중국을 최소한이라도 배려하고 한중 관계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외교안보수석의 경질을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와 같은 사실이, 그와 같은 발언이 사실인지 어쩐지 좀 애매합니다. 특히 그것이 위키리크스가 아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유출, 공개한 그런 것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런 저런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교안보수석의 인사 문제를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유출된 문서에 터 잡아서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의원** 위키리크스의 보도에 대해서 중국 측에 해명을 했거나 또는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 다음 질문 계속합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등이 6자회담이나 남북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입니까, 아닙니까?

미중 정상회담 이후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다녀간 뒤인 1월 26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사과가 6자회담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라고 남북 군사실무회담 결렬 직후인 2월 10일까지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는 정부의 태도를 잠깐 바꿨다가 시간이 흐르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남북대화를 촉구한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정부가 모

종의 방법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겁니까?

제 생각에 대화에 전제 조건을 붙여서 대화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보다 일단 대화를 트고 북한에게 약간의 퇴로를 열어 주면서 전제 조건과 비슷한 결과를 얻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믿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6자회담이든 남북대화든 간에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원론적인 입장이고요. 미·중 회담 전후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사안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진정성 있는 태도를 한국 정부로서는 바라고 있다 하는 점에서 일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직된 그런 것보다는 좀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서 북한에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어떠한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희가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북한이 그러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가 대화하고 그쪽으로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의원** 총리님 말씀이 전후가 모순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같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대화가 어렵다’, ‘그러나 대화하고 노력한다’ 이게 어떤 연관을 갖는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유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더욱 가미돼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낙연 의원** ‘우리의 노력’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아닙니다.

○**이낙연 의원** 그리고 북한이 지금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정부가 끝나는 날까지 남북 간에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건 겉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그런 상황만을 전제로 하면 그러한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도 다양한 방

안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낙연 의원** 남북관계가 파탄 났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최악입니다. 북한의 잘못이 큼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 관리 또한 빗나갔습니다.

정부는 대북정책 목표를 상생과 공영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현충일 기념사에서 ‘취임 이후 남북한의 상생과 공영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그렇습니까?

남북한의 상생과 공영을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와 민간의 대북지원이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1조 8833억 원이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3년 동안에는 208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상생과 공영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검토를 해보니 가장 잘된 합의서는 남북기본합의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볼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남북합의서가 6·15와 10·4 2개나 되는데 그것들을 굳이 제치고 총리가 서명한 기본합의서를 칭찬하는 것부터가 북한에서 볼 때는 매우 거북한 일일 것입니다만,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로 기본합의서를 검토해 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호체제 인정과 존중, 제2조는 내정 불간섭입니다. 북한은 이 합의를 전반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일성 주석 생일에 폭죽 쏘 돈으로 옥수수나 사다 먹으라면서 ‘북한은 정신을 좀 차려야 한다’고 하신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은 기본합의서에 충실한 것입니까? ‘김정일 사후 2~3년 안에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거나 ‘중국의 신세대 관료들은 한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외교안보수석의 발언은 어떻습니까?

최고지도자나 외교관은 어느 경우에도 절제된 표현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남북관계에 있어서 과거 정권이 취했던 취지, 선의의 취지의 정책이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어떠한 성과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부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실행하고 개혁·개방을 통해서 남북이 상호 존중하면서 상생·공영하는 정책을 취해 왔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

이 우리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지 못하고 종전과 같은 강고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것은 북한 정부의 책임이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다만 우리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 의원님의 절제된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북한 주민의 어려운 삶을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명분 있게 북한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노무현 정부 때 지원했던 그러한 것들이 전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책을 바꿔가지고 원칙을 세워서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저희로서도 정말 북한을 돕고 싶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지원했던 그 이상으로라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도움이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태도로 보서는 그러한 역할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필요 이상으로 경색이 돼 가지고 국민들께서, 일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낙연 의원** 제가 지금도 총리 말씀 듣고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오전에도 총리님 답변 듣다가 저건 아닌데 싫어서 제가 수첩에 메모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부처럼 남북관계를 북한이 주도하고 남한 정부를 길들이게 하지 않고 있다' 또 '노무현 정부 때의 대북 지원이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 시절에 남한 정부가 북한 정부에 의해서 길들여졌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오히려 북한 정부가, 북한이 남한에 의해서 길들여지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것을 중단시킨 것이 이명박 정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 명분 있는 어떤 변화가 있지 않으

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자세는 말로써는 그럴싸하지만 바로 그 결과는 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두 번째,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동·서독의 사례는 아마 교훈으로 삼으실 거예요. 동·서독을 보십시오.

동독이 근본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동·서독 간에 교류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독이 동독을 인정하고 돕고 교류함으로써 동독에 드디어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고 그래서 통일까지 간 겁니다. 선후를 바꿔서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평화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 북한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다? 오히려 과거 두 번의 핵실험 이런 것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는 핵 보유 국가로 평가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과거 정부가 했던 그런 지원정책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그렇지 않는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패가 됐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들도 전부 인도적인 차원이 아니고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관점에서 북한은 한국 정부를 이용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좋은 취지로 과거 정부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북한을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의 평화, 상생 공영할 수 있는 체제로 이끄는 데 실패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월드컵 4강전을, 3~4위전을 하고 있을 때, 세계의 잔치가 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바로 그 시험시간 중에 연평도 해전이 벌어진 겁니다.

북한이 그래서 안 되지요. 한국이, 남한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데, 한참 한반도에서 세계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발을 하고 살상을 하고 하는 그런 행동 같은 것은 언제든지 자기네들 페이스로, 자기 이익이 합당하게 한반도 관계를 끌고 가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이 한국 정부, 남한 측의 많은 인사들의 선의에 호응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 정부가 과도기적으로는 검색의 어려움이 있지만 원칙을 세워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의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일의 전부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지금 총리께서는 중대한 사실의 오인을 하고 계십니다. 남한 정부가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북한의 핵 능력을 강화시켰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험은 소위 압박정책을 쓰고 대화를 중단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핵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최근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그런 발언을 했고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북핵 위기가 생긴 것이 언제입니까? 햇볕 정책이 등장하기 6년 전, 1993년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그런 것을 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사실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께서도 답변을 듣고 계시다가 제가 부탁드릴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에게 대북정책이 있느냐 없느냐는 학계의 중대한 논란거리입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이 매우 경직된 압박정책에 속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북 압박정책이 성공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중국의 대북 지원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미국도 함께 북한을 압박해야 합니다. 셋째,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야 합니다.

이들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것이 충족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충족된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북한과 중국은 더욱 광범하게 상부상조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손들게 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는 사이에 북한은 나진·선봉까지 중국에 개방하면서 중국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은 대북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한국에 온 미국의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 말하자면 미국 내에서 대북 강경론자이겠지

요. 이 인사마저도 미국의 대북 인도 지원에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셋째, 요즘 북한의 경제사정은 고난의 행군 시절만큼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체제입니다.

대북 압박정책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압박을 받는 기간에 오히려 핵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렇고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한국 정부가 압박을 계속하면 북한이 무너질까요? 북한을 그토록 비난하셨던 고 황장엽 씨도 말년에는 ‘중국이 있는 한 북한은 붕괴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 말씀처럼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장관도 믿으시는 겁니까? 뭘 기다립니까? 북한의 붕괴를 기다립니까? 북한의 핵 보유를 기다립니까? 기다리다 보면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 될 뿐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대화하십시오. 대화를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의견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낙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그 많은 말씀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점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가 북한 붕괴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또 대화를 회피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남북관계에 있어서 지금 일어난 팩트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에, 아까 ‘대화를 회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지난해 1월에 남북간에 개성공단에 관해서 소위 실무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전, 2009년 말에는 그것을 위해서 남북이 소위 외국 공단도 좀 돌아보자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2월에는 금강산 문제에 관해서 실무회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3월에 천안함 폭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작년도 가을에는 또 이런 것들 속에서 남북이 실

무적으로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5일 날 남북의 적십자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적십자회담이 만약 열렸더라면, 모르겠습니다.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어떤 것이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인도적 지원에 관한 상호 관심사가 논의되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틀 전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회피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면서 뭘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지금 이렇게 경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군사실무회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북이 제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 앞뒤로 해서 소위 많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온갖 민간단체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팩스를 보내서 만나자 만나자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것이 큰 틀에서 아, 이것 평화공세의 그런 공세다 이렇게 보면서도 그래도 구체적으로 군사 고위급 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해서 저희들이 성의를 갖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군사실무회담이, 군사실무회담이라는 것은 사실 구체적인 것을 정하는 회담이 아닙니다. 고위급회담으로 마땅히 짚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무회담에서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차고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요지는 저희 정부가 북한의 무슨 붕괴를 기다리면서 마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또 대화를 회피하지 않는다. 이것은 큰 틀에 빠져 저희 정부가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의원 예, 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런 존재라는 것 예전에 몰랐을까요? 북한은 요즘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부터 그렇게 예측하기 어렵고 또는 때로는 턱없이 모험주의적이고 불합리하고 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국민이 이명박 정부에게 맡긴 것은 북한을 관리하라는 것이지 북한하고 싸우라고 맡긴 것이 아닐 겁니다. 싸우기로 하면 군사정권이 더 낫지요.

통일부장은 '북한은 전술적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지난주에도 말

씀하셨습니다. 장관이 말씀하신 근본적 변화라는 건 무엇입니까? 한국 통일부장관이 주문하면 북한은 그대로 되는 겁니까? 그런 변화를 위해서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북한을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보십시오. 미국의 네오콘은 자기중심적 도덕과 일방주의적 패권으로 세계를 길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약화시켰을 뿐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한국판 네오콘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에게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남북관계를 대담하게 개선하십시오. 그것은 이명박 정부 같은 보수정권에게 더 쉬운 일입니다.

미국에서도 공화당 출신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미중 국교정상화를 실현하지 않았습니까?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를 친북정권으로 규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장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먼저 '전술적 변화' 또 '근본적 변화' 이렇게 조금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마는 저는 북한의 전술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하는 척하는 변화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근본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저는 중요한 근본적 변화라고 봅니다.

북한이 그야말로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야말로 남북이 경제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저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비핵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그야말로 개혁·개방을 통해서 남북이 경제협력 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되면 북한의 근본적 변화가 되는 것이고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반도에 정말로 안정과 평화, 이렇게 상호발전, 이렇게 상생공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를 정말로 대담하게 좀 개선하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근본적으로 동의합니

다. 정말로 남북관계를 대담하게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노력을 저희들도 하고 싶고 그렇게 지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의원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누군들 원치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말로만 하고 진정성 있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신뢰만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점점 움츠리고 더 방어적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대북 태도에서 늘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어떤 관리정책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더 고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이낙연 의원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특사단 관련한 국정원 사건을 보고 받으신 게 17일 조찬 후라고 그러셨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낙연 의원 그 보고는 단순 절도 비스듬하다는 보고였습니까, 아니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에 무슨 사고가 생겼다 하는 보고였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단순 절도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낙연 의원 17일 아침까지도 단순 절도라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낙연 의원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관련 사건이라는 것은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제가 그때 인지하였습니다. 그 특사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인지……

○이낙연 의원 언제라고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17일 아침입니다.

○이낙연 의원 맨 처음에는 단순 절도라고 그랬는데?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낙연 의원 그러니까 17일 아침에……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이후에 언론기관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이 문제가 사회적 파장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낙연 의원 17일 아침이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낙연 의원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관련

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하신 것이 17일 아침이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이후에 언론기관에서 제가 읽어 보고 인식을 한 겁니다.

○이낙연 의원 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파장을 나올 수 있다는 것만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낙연 의원 이명박 정부도 떠날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파탄과 미·중 불균형 외교의 무거운 짐을 국가와 후임 정부에게 남기지 마십시오. 대외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빛과 그림자를 길게 드리웁니다.

정권에 대한 평가는 오래 가는 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이낙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의 한나라당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의원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의 한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올해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정독했습니다.

매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꼼꼼히 읽는 것으로서 한 해를 시작하던 것이 저의 오랜 습관입니다.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변했지만 이 점은 변함이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야 하고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북한 내부의 사정도 어느 때보다도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남 전략·전술 면에서도 변함없이 북한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올해는 북한이 설정한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열기 위한 교두보를 여는 해로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지만, 뒤로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협박과 공갈을 통해 한반도 긴장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변화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을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대남 전략에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북한의 공격으로 마흔여섯 명의 천안함 순국용사를 잃었고 그로부터 8개월 후에 연평도 피격 앞에 우리의 소중한 국민과 병사를 잃었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정체를 똑바로 이해하고 느슨했던 우리의 안보관을 확고히 정립해야 합니다.

이에 2011년 대한민국 안보는 우리 자신, 그리고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안보의 철저한 재점검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안보는 우리가 피땀 흘려 쌓은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과 같은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 정책에 대해서는 미봉책이나 포폴리즘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며 안보관, 북한관, 통일관에 대해 명확하게 중심을 잡고 원칙을 견지하면서 행동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 또한 북한 정권의 호전성을 직시해야 하고 하나 된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내부를 교란시키려는 북한의 분열적 책동을 경계하여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데 누가 우리의 영토를 지켜 주고 생명을 지켜 주겠습니까?

그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께서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교실에서 서서히 대한민국 안보의 중요성이 사라지고 있는 사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 이후에 일선 학교에서 규탄대회를 얼마나 열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충주, 청주, 뒤 대전 등의 일부 학교에서 그와 같은 규탄대회를 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한기호 의원 제가 모든 언론을 전부 확인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전체 학교는, 딱 2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돌이켜 보면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난 10년의 정권을 거치면서 북한의 위협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등으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의 안보관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위안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안보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도 안보의식 강화만이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 안보교육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초·중·고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안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 동영상 개발 그리고 전문 강사 풀 구축 또 교과서 개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 향후에도 정확하게 안보교육은 어려서부터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한기호 의원 총리께서는 현재 국가 위기 시민·관·군 합동대응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동안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천안함·연평도 도발 후에 이것을 교훈 삼아서 민·관·군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월 18일, 며칠 전입니다마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제가, 총리가 그 의장입니다마는 안보 대비태세 및 국민 안보의식 강화 방안 등을 논의를 하고 금년도에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한기호 의원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국가전쟁지도지침, 대통령 훈령 제284호입니다.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운영하고 있게 되어 있으나 전체 44개 중앙부처 중 17개 부처만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지자체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전시에 대비한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확

대 및 역할 재정립을 비롯해서 구제역, 폭설, 폭우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민·관·군의 신속하고 정밀한 협조를 위한 비상대비업무 체계 및 인력의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연평도 피격 때 주민생활 안정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규정이 없다는 타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훈령대로 100% 보직을 하든지, 위기관리조정관으로 변경하여 국가 위기시에 효과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 현역 군인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총리께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비상계획관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비상계획관이 없는 중앙부처 그리고 경기·인천·강원도 등 접경 지역에 비상계획관을 선발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역 군인을 상주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더 들어서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호 의원 총리께서는 국방업무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각 개별적인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달리 있다고 봅니다. 뭐 어느 쪽이 반드시 우월하다,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기호 의원 국방은 국가의 삶과 죽음을 다루는 영역으로서 효율성만을 따질 수 없음에도 문민화라는 명분으로 국방부차관, 방사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연구원장, 국방부 개혁실장 등의 임명직에 과거 군 출신을 보직하던 것을 현 정부 들어서는 군의 경력이 없는 민간자원을 보임했습니다.

하지만 군이라는 특수 분야를 민간인이 재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을 볼 때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비리 척결을 위해서 군 출신이 근무하던 직위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군심을 하나로 모아야 하지만 문민화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오히려 군심의 와해를 불러오고 있다고 볼 수도 있

습니다. 현 정부에서 ‘국방개혁의 전도사’ ‘국방비리 척결자’가 비리의 당사자로 연루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지적하시는 분이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는 만큼 그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누구든지 간에 공직 관련해서 비리가 있는, 위법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한기호 의원 그러면 타 정부 부처에도 문제가 있다든지 개혁을 위해서는 민간인이 지금까지 근무하던 자리에 군 출신을 보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직책에 적합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민간인, 군인 출신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요컨대 업무 추진력, 전문성 등을 감안을 해서 임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기호 의원 감사원장님 자리도 과거에 군 출신이, 많은 인원들이 성공적으로 했었습니다. 아마 역대 원장님들 자리를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 앞으로 이런 면에서 군 출신도 정부에서, 어떠한 발탁 직위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내의 중요한 직책에 군 출신들이 또 임명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기호 의원 분단 이후 60년 동안 대한민국 안보를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강원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으로 분단된 강원도는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 있다는 이유로 분단 이후 반세기 넘게 동안 군사시설보호법, 그 외의 각종 규제로 인해서 제한을 받고 있고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원도민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라면 그동안 어떠한 고통과 희생도 묵묵히 참아 왔습니다. 그리고 안보를 위한 고통이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민들이 진정으로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강원도에 대한 정부의 홀대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최근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처

음으로 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는 4월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강원도 홀대론'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정부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당한 홀대와 구박의 차원을 넘어 폄박이라 할 만큼 서자 취급을 당한 강원도를 더 이상 무관심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역대 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강원도에 대한 정책이 과연 있기는 한지의심케 하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24년, 원주-강릉 복선전철 14년, 경춘선 복선전철 13년, 제2영동고속도로 8년, 이 수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사업 추진 결정 또는 착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 지난해 완공된 경춘선 복선전철은 차치하고라도 나머지 수치는 완공이 아닌 정부가 사업 추진을 결정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차라리 섬이라면 배라도 만들어서 다니면 그만이지만 엄연히 육지인 강원도에 대해서 정부가 이처럼 무관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정부가 강원도를 특별히 홀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동안 SOC 투자가 경제성 위주로 일어나다 보니까 산악 지형이 많고 교통량이 적은 강원도의 경우에 그러한 타당성을 통과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역 균형발전 효과와 SOC 확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호 의원** 강원도의 각종 SOC사업 시 경제성에 대한 논리로 지연되거나 착수되지 못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민의 유동 인구가 아닌 전국 각지에서 삶의 재충전을 위해 방문하는 국가적 쉼터이며 생명의 활력을 재건하는 곳입니다. 길이 없거나 열악해서 방문하지 못하는 것이지 접근성만 좋다면 가장 훌륭한 대한민국의 생명의 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맹점을 감안하여 국토 균형발전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0년, 그동안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냈지만 그 이면에는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낙후지역의 대명사인 접경지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나라가 있으니까 접경지역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접경지역은 수많은 규제와 제한을 받아 왔고 이로 인해 삼질 한 번 제대로 못하는 지역이 바로 접경지역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지역 발전은 정체될 수밖에 없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낙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2000년 1월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해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의 무관심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도 미미하여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대한민국에서 안보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 접경지역의 60년 희생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접경지역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온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접경지역을 국토 신성장의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초광역권 개발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빨리 통과시키는 노력을 정부에서 할 것이고 또 의원님도 그 점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의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법 제명 변경을 아예 했습니다. '접경지역의 발전 및 주민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은 이 자체가 서민들까지를 아우르기 위한 생계형 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함께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님!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되었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국방개혁을 언급했는데 그동안의 국방개혁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 정부는 최초 수립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변화된 국방 환경을 고려해서

09년도에 실용적 계획으로 보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 등과 같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일단 현존 전력을 시급히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국방개혁의 대폭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앞으로도 국지 도발 및 비대칭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고 전면전 및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 가능한 군사력을 구축하도록 계획을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한기호 의원**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선정한 73개의 과제에 대해서 실제로 제목은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이며 군 복무를 40년간 하고 현재 국방위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전문을 보고해 달라고 하는데 보고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부하는 것은 자신이 없거나 민심을 외면하거나 군심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국방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완성한 이후에 이것은 보고를 드릴 겁니다.

○**한기호 의원** 논의 과정에서는 국회의원이 개입하면 안 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토의는 가능합니다.

○**한기호 의원** 그렇다면 보고가 되어야지 그다음에 토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 노력하겠습니다.

○**한기호 의원** 국방선진화위원장을 포함해서 진정으로 군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거나 편견을 가진 인사들이 만든 내용이 무조건 강요되고 있는 것이거나 국방부가 군에서 에스맨으로 전략해서 그런지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합동군 사령부를 신설한다, 3군사관학교 통합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3군 합동성 강화의 중요한 요소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합동성은 선진국 군대의 척도입니다. 또 시스템을 합동성 위주로 강화시키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군에도 합동성 강화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3군사관학교 통합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군 대학을 통합하는 과제 그리고 각 군 보수과정에 합동성 교육을 강화시키는 문제는 바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 해외 원정작전을 하는 미군은 어느 나라보다도 합동성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

다. 한국은 인-랜드(In-Land) 작전을 하는 국가입니다. 기본개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동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육해공군 3군 균형발전’이라는 그럴싸한 표현으로 포장하면서 각 군의 특성을 무시한 국방선진화위원회의 국방개혁안이 잘못 접근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만든 과제에 대해서 실제 검토를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각 군의 고유 특성, 정통성 이것은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다른 군의 특성과 잘 융합할 적에 전투력의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싸울 것이냐를 구현하는 것이 결국 합동성을 강화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미래선진화위원회에서 제시한 것도 일부는 보완해 가지고 국방과제로 삼았지만 대부분은 다 국방과제로 추진이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한기호 의원** 국방개혁 대의에 공감은 하지만 군 전력 증강을 혁신하고자 하는 국방개혁이 당사자인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성공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군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현역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기를 바라고, 국회의원 국방위원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호 의원** 최근 서북해역사령부 창설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고 또한 서북 5도의 요새화, 해병대 병력 1200~2000명 증원, 이와 같은 것이 계속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창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략적 요충지인 서북도서를 방위하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해·공의 전력을 통합해서 합동전력 수행이 가능하므로 또 지리적 취약점을 보강시키기 위해서 창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기호 의원** 알겠습니다.

대북 심리전의 재개로 물품 살포를 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GPS가 장착된 살포 목표 지역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민군을 목표로 한 것인지 주민을 목표로 한 것인지, 반응에 대한 첩보나 정보가 있는 것인지 또 이와 같은 것이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어도 괜찮은 것

인지?

○국방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한기호 의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보도가 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마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기호 의원 앞으로 이런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앞에서 다른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이 정교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한기호 의원 감사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인해서 우리의 소중한 장병과 국민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한 범법자가 있는데 그 범법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마움을 그 사람이 떠나야 알 수 있다고 했듯이 늦게야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바로 국가안보가 그렇습니다. 국가안보를 흔드는 세력에 대한 대응에 있어 여야도 함께해야 하며, 보수라고 불리는 단체는 보수가 아닌 애국단체라고 해야 합니다. 국가를 수호하는 자를 한편으로 밀어내서는 국가의 장래가 없습니다. 국가안보는 애국의 이름으로 하나 될 때 비로소 우리 자신과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냉혹한 교훈이며, 강력하고 튼튼한 안보 없이는 행복도, 경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지도 정치도 없습니다.

이 점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님, 국무위원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

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 의원(249인)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희태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진식
이강래	이경재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성현
이영애	이용섭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윤선	조정식	조진래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천정배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진하			

○개의 시 재석 의원(114인)

강길부	강명순	강성천	강승규
고홍길	구상찬	권영진	김광림
김기현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동	김성조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장수
김재균	김정	김정권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혜성	김희철
노철래	류근찬	박근혜	박대해
박보환	박우순	박주선	박준선
박희태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서병수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신성범	안규백	오제세
우제창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윤상일	윤석용	이두아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상권	이영애
이은재	이인제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진복	이진삼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임동규	장광근	장병완	전재희
전혜숙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희	최병국	최재성	한기호
허원제	허천	현기환	홍사덕
홍정욱	황영철		

○속개 시 재석 의원(68인)

강기정	강승규	고홍길	김상희
김성동	김성순	김소남	김영환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혜성	김희철	박기춘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박지원	백원우
서종표	손범규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학용	오제세	우윤근
원혜영	유기준	유성엽	유정현
윤석용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범래	이윤석	이진복	이찬열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병완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수성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해결	주승용	차명진	최규식
최재성	한기호	허천	현경병
홍사덕	홍재형	황영철	황진하

○산회 시 재석 의원(57인)

강명순	강창일	김무성	김상희
김성곤	김성동	김성조	김소남
김영선	김영진	김옥이	김장수
김진애	김재윤	김춘진	김충조
박기춘	박병석	박보환	박상천
박선숙	박영아	박지원	백원우
백재현	서종표	송영선	신건
안형환	우윤근	원유철	유성엽
유일호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미경	이은재	이정선	이진복
임동규	전재희	전현희	정두언
정범구	정장선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조경태	조배숙	차명진
최인기	한기호	허천	홍영표
홍재형			

○출장 의원(4인)

김금래 이상득 이애주 최영희

○청가 의원(15인)

김을동 나성린 박선영 배영식
 안상수 원희목 이상민 이용경
 이주영 이혜훈 장윤석 조해진
 최연희 홍일표 홍희덕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권오을
 입법차장 김성곤
 의사국장 한공식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김황식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통일부장관 현인택
 국방부장관 김관진

【보고사항】

○의안 제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1. 2. 24 이찬열·박은수·김진표·조정식·조영택·유선호·강창일·오제세·추미애·송민순·장세환·최재성 의원 발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1. 2. 24 오제세·김재균·김효석·김성곤·유선호·김춘진·김용구·최규성·이찬열·조영택·조배숙·손범규·원희목·박은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2010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2011. 2. 24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제출)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1. 2. 24 오제세·김효석·김춘진·김용구·최규성·이찬열·조영택·조배숙·손범규·김재균 의원 발의)

2월 25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11. 2. 24 김재윤·강창일·김우남·김용구·이미경·안민석·신영수·홍희덕·김진애·김상희·홍영표·원혜영·이용섭·최규성·정병국 의원 발의)

2월 2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

(2011. 2. 24 이윤성·김태원·김을동·권경석·한기호·권택기·최경희·송훈석·원유철·김세연·조진래 의원 발의)

2월 2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조윤선 의원 대표발의)

(2011. 2. 24 조윤선·유기준·원혜영·고홍길·이정선·이범래·나경원·강용석·이두아·김성동·이병석·구상찬·박준선·권영진·홍사덕·조진형·나성린·박진·이한성·정두언·한선교·허원제·이철우·진성호·장광근·황영철·신성범·김성수·조전혁·이춘식·유일호·이은재·이사철·배은희·진영·임동규·최경희·이성현·김금래·황진하·김장수·이정현·강명순 의원 발의)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최영희) 징계안

(2011. 2. 24 이은재 의원 요구)

2월 25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201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이상 2건 2011. 2. 24 농림수산물·법제사법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후보자(김능환) 인사

청문요청안

(2011. 2. 11 대법원장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대법관(이상훈) 임명동의안

(2010. 1. 31 대통령 제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대법관(이상훈)임명동의에 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장 보고

○요구서 제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2011. 2. 24 박지원·권영길·이용경·조승수·유성엽 의원 등 94인 제출)